

여성정책포럼

# 탈북여성의 사회통합

일시 | 2010. 11. 25(목) 14:00 ~ 16: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주최 |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RESIDENTIAL COMMITTEE ON SOCIAL COHES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후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I 모시는 글

한국사회로 이주해오는 탈북이주민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만여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탈북여성이 급격히 증가해서 입국자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로서의 탈북이주민들은, 경제적으로 한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남한과 대치되는 사회에서 이주해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탈북여성은 일반적인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젠더적 관점에서 이들만의 고유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탈북여성의 사회통합’이란 주제로, 탈북여성들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남북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미래의 긍정적 관계에도 기여하는 과정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탈북여성의 사회통합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탈북여성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고 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김 태 현



13:30-14:00	등 록
14:00-14:20	개 회 식 인 사 말 사회: 신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발 표	사회: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사회통합연구실장)
14:20-15:10	발표 1 탈북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10대 전략과제 발표자: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탈북여성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 발표자: 김화순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5:10-15:40	토론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 최영애 (북한이탈여성지원과연대 대표) 오태봉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과장)
15:40-16:00	중 합 토 론
16:00	폐 회



# I 목 차

## □ 발표 1

탈북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10대 전략과제 ..... 1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발표 2

탈북여성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 ..... 29

김화순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 토론문

1. “탈북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10대 전략과제” 토론문 ..... 61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2. 탈북여성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실천과제 ..... 65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

3. 여성정책포럼 「탈북여성의 사회통합」 토론문 ..... 69

최영애 (북한이탈여성지원과연대 대표)

4. 탈북여성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75

오태봉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과장)

◆ 발표 1 ◆

| 여성정책포럼 | 탈북여성의 사회통합

# 탈북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10대 전략과제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탈북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10대 전략과제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0년 5월말 현재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19,010명으로 2002년 입국자수가 1,000명을 넘어선 이래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유옥, 2010). 정부는 1997년 1월 13일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한 이래 수차의 개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하나원을 통한 초기정착교육을 실시하고, 거주지에 정착하기 위한 정착금지원, 주택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사회보장지원, 정착도우미 및 보호담당관 등을 통한 거주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착지원정책들이 제공되고 있는 이유는 통일시대의 남북한 사회의 통합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정책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초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소수자이면서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빈곤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남한과 다른 체제의 사회에서 이주해왔다는 이유로 다양한 사회적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은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 정착및 체류가 증가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60여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결과 이념, 사회, 문화면에서 전혀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남한 사회의 정착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충격과 심리적 이질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금이야말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와 자본주의체제로의 통합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추구하면서 ‘열린 사회’ 내지 ‘문화적 용해의 장’을 향한 새로운 사회통합의 비전을 열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정착과정에서 취업이야말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6%로 일반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1.3%인 것을 감안해볼 때 매우 낮은 실정이다.<sup>1)</sup> 이러한 전반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현 단계에서 이들이 한국사회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향후 심각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주외국인과 달리 초기정착과정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정책은 특정 소수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는 아닌가, 아울러 4년제 대학 무시험입학제와 학비무상제와 같은 혜택은 입시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상황에서 보편적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도 있어 왔다.<sup>2)</sup> 형평성에 어긋나는 복지 수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향후 다가올 통일시대의 사회통합의 사전작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시대에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탈북이주민들과 남한주민들 간의 격차나 차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평성의 논리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들은 한국사회의 소수자로 남아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중요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까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의 대상은 노령자, 장애인을 위한 정착 기본금과 경제활동 대상자들을 위한 정착 가산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러한 대상구분에 젠더간 차이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입국비율을 보면, 전체 탈북자 중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9년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에 불과하던 여성의 입국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누적인원수 기준으로 최근에는 전체 입국자중 약 80%에 이르고 있다. 이번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 겪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책을 성인지적 시각에서 다시 정립하는데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탈북여성들은 중국이나 제3국을 경유하는 ‘목숨을 건 한국행’ 과정에서 성폭력, 인신매매 등 인권 침해 경험을 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에 들어오는 중간경유국가에서 생존하기 위한 적응전략의 하나로 결혼을 선택한 결과 경유하는 국가별로 2-3개의 국적을 가진 가족원들로 구성되는 복잡한 형태의 국제결혼 가족형태를 구성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정착한 뒤에도 결혼을 통한 가족의 구성 시에 자녀양육과 책임의 문제를 떠안을 뿐만 아니라, 취업 혹은 취업이후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들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데 비해서 탈북여성은 탈북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으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실태조사.” 2009. 통일부 용역보고서.

2) 2007. 3.29. 한반도 평화연구원에서 주최 공개토론회 “1만 탈북 이주민, 우리의 ‘짐’인가 ‘힘’인가.

로 인한 심신의 불안정, 자기자신감의 비하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외국인이주민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이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탈북여성들은 정서적·심리적 치유와 지원, 경제적 자립을 물질적 지원과 취업지원 등 복합적인 욕구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정책적 지원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탈북여성들의 한국정착에 필요한 일반화된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입국단계와 생애주기, 학력수준, 탈북이후의 남한에서의 체류기간을 고려해서 집단별로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의 유형화시킨 뒤 각각의 해결방법의 모색을 통한 전략과제와 추진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탈북여성 집단을 세분화하고 이 세분화된 집단별로 겪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정의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전략과제를 개발하게 될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영역별로 탈북여성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착초기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생애주기 전체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안착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탈북여성의 지속적인 한국사회에서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일회적인 지원을 넘어선 지속적이며 집단별로 분화된 보다 체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탈북여성의 한국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내기 위한 집단별 유형구분의 기준은 북한사회를 탈출해서 중간체류국가를 경유한 뒤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전까지의 전체적인 상황을 나누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입국초기에서 한국사회에 정착해가면서 취업을 위한 준비단계를 거쳐서 취업하여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해가는 탈북이후 5년 미만이 된 집단과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거나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과 재취업을 반복하고 있는 탈북 이후 5년 이상된 집단별로 필요한 정책욕구를 구분해볼 수 있다. 탈북 이후 5년 미만인 정착초기는 경제활동준비해가는 시기로서 초기 한국사초기 한국사회의 적응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게 된다. 입국시기까지 침해받았던 인권의식의 회복,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지원,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훈련기회의 제공, 한국사회의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사회주의의 문화와 한국사회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기회의 제공, 탈북여성의 자아정체성 확립과 사회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이 시기의 정책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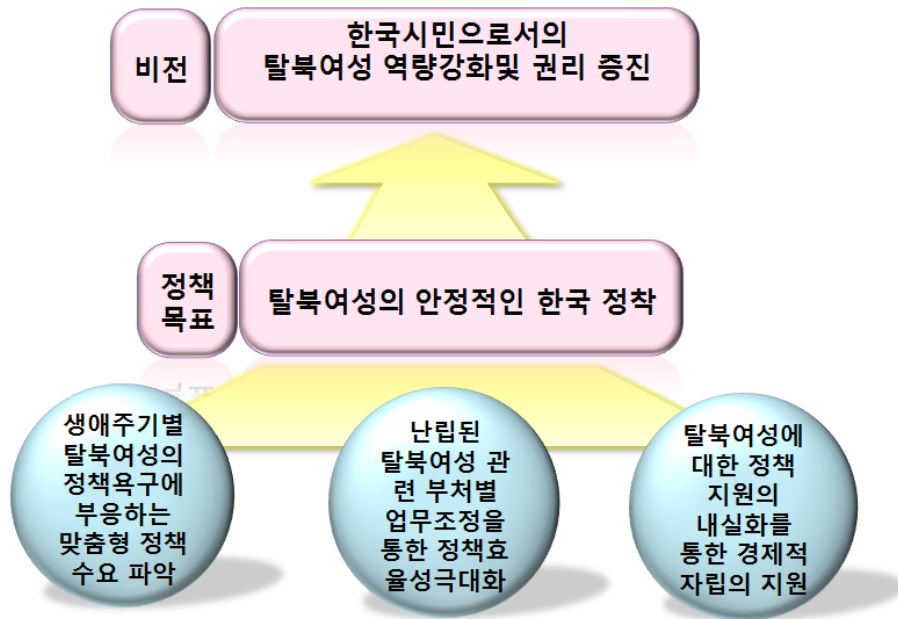
반면 현재의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이 초기정착과정에 노동시장진입과정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남아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다 중장기적이며 개인의 생애주기의 매단계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탈북여성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탈북여성의 경제적인 자립 지원을 하는 것은 이들의 한국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라



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다문화가정의 여성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산후 돌보미, 아이돌보미 서비스, 예방접종 서비스, 영양제 제공, 육아정보제공)의 탈북여성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 모색을 하고 직장에서의 중도탈락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여성 새터민 대상의 소액금융 대출 프로그램 실시, 취업한 뒤에도 원하는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의 제공, 자녀들과의 가족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아울러 은퇴이후에도 탈북여성 대상 직업교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노령탈북여성 대상 정책을 발굴해서 탈북여성이 생애전체에 걸쳐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향후 고령 탈북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갈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은 탈북여성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며 장기기초수급대상으로 경제적인 미자립집단부터 북한체제 내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아왔던 교사와 의사 등의 지식인집단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대상별로 분화된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다. 초기의 북한이탈주민은 노동자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 유학생, 외교관, 무역종사자, 고위인사 등 출신성분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제는 양적인 규모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의 직업구성도 다양해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단순한 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자로서가 아니라 통일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인적자본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여성 직종에 국한되어 있는 현재의 탈북여성의 직업교육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선호하는 직종 파악 및 직업 정보의 제공및 노동수요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탈북여성을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들이 가진 북한에서의 학력과 경력을 인정하고 생산적인 역량을 강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지식인계층 출신의 탈북여성과 현재 남한에서 대학단계의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한 FGI조사를 해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탈북여성집단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한 집단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향후 다가올 통일시대에 우리사회가 직면해야할 사회통합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동시에 늘어나는 탈북민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매개자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탈북여성은 우리와 동시대의 같은 공간에 존재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삶의 경험과 자원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할 우리가 추구하는 다가오는 미래의 한국사회의 어떠한 구성원도 출신국가나 자신의 인종에 따른 배제와 차별, 수모와 굴욕을 당하지 않는 사회여야 되기 때문이다.



[그림 1] 탈북여성의 한국사회 정착 과제 도출

## 2. 탈북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 과제 1

### 탈북여성지원 원스톱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가. 목 적

- 현재 거주지 보호단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거주지·신변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등 다소 중복적이며 상호유기적인 연결이 부족한 다양한 주체들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다양한 지원체계들이 통합되어 여러 개의 지원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하나원이 정착초기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기능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접교육을 하는 교육기능, 취업적응, 주택배정, 수료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사회적응이라는 모든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인원과 기간면에서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에는 이를 보완해서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프로그램이 필요함.
- 초창기 정착단계에서는 많은 지원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는 반면에 하나센터의 1년간의 적응지원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거의 모든 지원정책이 중단됨. 남한사회에서의 정착이 완료되지 않은 이후의 시기는 탈북여성의 남한사회 정착지원에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탈북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초기정착과정인 1년이 지난 뒤에 취업을 통한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정착하지 못한 탈북여성은 사회부적응자나 장기기초수급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큼. 이들이 취약 계층으로 전락할 경우 통일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대될 소지가 큼.

## 나. 현재제도의 문제점

- 현재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초생계수급은 하나원 퇴소이후 입국 6개월은 모조건 수급, 6개월은 조건부 수급하게 되어 있음. 최장 1년 동안은 기초수급생활권자로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수 있으나 1년의 수급기간이 끝나면 이후부터 기초생활수급등의 실질적인 도움이 중단됨(편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질병및 장애인 가정등 지속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집단을 제외).
-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특화된 One-Stop 서비스기관으로 하나원 수료 이후 1년간 거주지 편입절차부터 취업알선 및 직장 적응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워졌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은 초기정착 1년의 기간만으로 부족함.
- 정착도우미는 초기 거주지 생활의 정보나 도움을 직접 제공해주는 주거밀착형 정착지원체계 구축 및 다양한 계층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됨. 현재 북한이탈주민 1세대당 정착도우미 2명이 1년간 전담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경제적 홀로서기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기간이 1년에 한정되어 있어 잦은 직장에서의 이직과 가족의 해체등으로 불안정한 정착과정을 겪고 있는 탈북여성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임.
- 전문상담사 제도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통합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편입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나 여성을 위한 특별한 배려나 지원은 없음.
- 탈북여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반 한국인의 이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주민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탈북여성과 밀착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제공되어야 함.

## 다. 운영방안

-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은 남성 2.5점, 여성 2.3점으로 가장 높아 탈북자들에 대한 원활

한 구직 정보 제공이 필요(201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통일부)

〈표 1〉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 중에 겪은 어려움 - 노동시장특성

(단위 : %, 명, 점)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일거리가 없거나 부족	남성	55.0	11.7	11.7	15.0	6.7	100.0(60)	2.1
	여성	52.0	18.1	15.2	10.5	4.1	100.0(171)	2.0
	전체	52.8	16.5	14.3	11.7	4.8	100.0(231)	2.0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	남성	43.3	10.0	10.0	31.7	5.0	100.0(60)	2.5
	여성	40.9	17.5	18.1	18.1	5.3	100.0(171)	2.3
	전체	41.6	15.6	16.0	21.6	5.2	100.0(231)	2.3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나쁨	남성	56.7	18.3	13.3	10.0	1.7	100.0(60)	1.8
	여성	49.7	17.5	18.7	11.1	2.9	100.0(171)	2.0
	전체	51.5	17.7	17.3	10.8	2.6	100.0(231)	2.0
급여 수준이 낮은 일자리	남성	46.7	15.0	15.0	18.3	5.0	100.0(60)	2.2
	여성	48.5	16.4	12.3	18.1	4.7	100.0(171)	2.1
	전체	48.1	16.0	13.0	18.2	4.8	100.0(231)	2.2
고용 불안정 (비정규직)	남성	51.7	13.3	11.7	16.7	6.7	100.0(60)	2.1
	여성	52.0	17.5	15.2	12.3	2.9	100.0(171)	2.0
	전체	51.9	16.5	14.3	13.4	3.9	100.0(231)	2.0

주 : 평균은 5점 만점으로 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임.

노동시장 특성면에서 구직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거리가 부족해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족',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 나쁨', '급여수준이 낮은 일자리', '고용불안정(비정규직)'등 5개 부문으로 살펴보았다. 노동시장 특성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50%이상으로 나타났고 5점으로 환산한 결과에서는 대부분 2점 이상으로 나타남.

○ 경력단절 탈북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72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 북한이탈주민의 집단거주지역 2곳을 탈북여성을 위한 지정센터로 지정
- 지정된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중인 탈북여성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동행면접, 새일여성인턴,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 유흥업, 다단계사업, 마약유통업 등 비공식적이거나 불법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탈북여성의 직업훈련과 알선을 통한 전직유도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대상자에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하지 못하는 탈북여성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할 것
  - 현재 저소득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정,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게 가사간병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과제 2

## 탈북여성 대상 전문직 재교육프로그램

### 가. 목 적

- 북한에서의 전문직 종사자였던 탈북여성들의 입국전 특성을 파악한 맞춤형 직업알선을 통한 탈북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증대
- 이전의 학력과 직업경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여 탈북여성의 개인적 성취감 증진과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지속에 기여
- 직업재훈련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직 종사여성들이 남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능력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전문직 종사여성들의 경험을 살린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맞춤형 취업알선기회 제공(교육, 의료, 보건, 과학기술, 예술분야 등)

### 나. 현재제도의 문제점

- 이주초기 북한에서의 당사자가 소지한 해당자격증이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전의 경력사항에 대한 자료화 작업및 이를 활용한 취업알선은 이루어지지 못함.
- 탈북여성 전체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상정하고 이들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취업알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북한에서의 학력이나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센터의 여성 교육생의 경우 일방적으로 기초전자조립, 봉제, 품질관리 기초, 피부미용 등 4가지 과정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직에 종사했던 탈북여성들의 취업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함.
- 북한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을 조사한 결과 전문직 종사자는 전체여성의 5.2%, 예술·체육 종사자는 3.5%, 사무직 종사자는 8.7%로 나타남. 노동자는 36.0%인 것에 비추어 직

업구성이 다양해짐을 알 수 있음(201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통일부).

〈표 2〉 북한에서 가장 오래한 직업

(단위: %, 명)

	남성		여성		전체	
직업 없음	3.2	10	4.6	41	4.3	51
노동자	28.3	89	36.0	319	34.0	408
농장원	3.5	11	7.9	70	6.8	81
군인	19.7	62	2.6	23	7.1	85
봉사원	0.3	1	3.6	32	2.8	33
고기잡이	0.6	2	0.1	1	0.3	3
사무직	7.3	23	<b>8.7</b>	<b>77</b>	8.3	100
관리직	2.2	7	0.9	8	1.3	15
전문직(교원, 의사 등)	3.8	12	<b>5.2</b>	<b>46</b>	4.8	58
예술·체육	1.6	5	<b>3.5</b>	<b>31</b>	3.0	36
외화벌이	2.5	8	0.7	6	1.2	14
가정부양	0.0	0	5.4	48	4.0	48
학생	20.6	65	15.7	139	17.0	204
기타	6.3	20	5.0	44	5.3	64
전체	100.0	315	100.0	885	100.0	1200

- 자격증획득이 가능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교육기간 장기적 교육기간의 제공과 직업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질적 내실화가 필요함.
- 2010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졸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가 넘어 고학력자의 비중이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음.
  - 40-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전문직 출신 탈북여성들은 고난의 행군시대에 젊은 시절을 보내 현재 남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세대이므로 북한에서 쌓은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요구됨.
- 북한에서 종사하던 일과 유사할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대부분의 탈북여성들은 탈북과정에서 얻은 빛과 남은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될 필요성과 당장의 생계의 문제에 직면하여서 손쉽게 취업할 수 있는 비전문직의 일자리를 선택하고 있음.

- 조사결과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식당 종업원 등)이 26.6%으로 가장 많고<sup>3)</sup> 이어 단순노무 종사자가 16.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제조업 취업)이 15.9%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 단순기술이 요구되는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201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통일부).

〈표 3〉 취업자 직업 분포

(단위 : %, 명)

	남성		여성		전체	
서비스 종사자(식당 종업원 등)	5.6	10	26.6	77	18.6	87
판매 종사자(영업직)	10.7	19	12.4	36	11.8	55
농업, 임업, 어업의 경험 있는 기술자	1.7	3	1.0	3	1.3	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9	14	3.4	10	5.1	2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제조업 취업)	25.4	45	15.9	46	19.5	91
단순 노무 종사자(노동 등)	27.1	48	16.2	47	20.3	95
고위직원 혹은 관리자(사업주 포함)	5.1	9	2.4	7	3.4	16
해당 업무관련 전문가	9.0	16	9.3	27	9.2	43
기술자 및 준전문가	2.8	5	0.3	1	1.3	6
사무 종사자	4.5	8	11.4	33	8.8	41
해당사항이 없음	0.0	0	1.0	3	0.6	3
전체	100.0	177	100.0	290	100.0	467

- 원하지 않은 직종에 취업한 결과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율을 보이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재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해 원하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 운영방안

- 전문직 출신의 탈북여성인력 DB구축: 학력및 경력확인서 기재의무화
  - 운영주체: 여성가족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취업·진학 및 기술교육(외부 위탁교육 포함) 실시.
  - 현재 하나원 출소 때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박람회(주관: 중소기업청)와 별도로 직업재훈련 혹은 자격증 취득이후 전문직에 종사했던 탈북여성 중심의 취업알선이 이루어져

3) 이는 여성취업자들의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숙박및음식점업(23.4%)이 제조업(24.1%)에 이어 두 번째로 많기 때문이다.

야 함

- 직업훈련은 이전의 직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훈련 종목중심으로 지원: 영어중심으로 된 해당분야의 전문용어 재교육, 컴퓨터 교육
- 운영주체: 대학의 정규과정에 편입, 평생교육원, 민간직업훈련센터 중 전공별 적합성을 고려해서 선정
- 지원내용: 북한에서 받은 것과 유사한 종류의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기간동안의 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
- 일정기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질적인 직장적응에 필요한 준비기간 제공. 이때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제휴 도는 협약을 맺고 해당사업체에 일정액의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함.
- 유사 직종 종사자들 사이에서 취업경험과 구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탈북여성 취업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멘토링사업 추진

### 과제 3

###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인력양성 프로그램

#### 가. 목 적

- 탈북여성 한국사회 통합을 위해서 일정 교육과정을 담당할 교육인력으로 양성
  -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통합을 위해서 하나원에서의 입국초기의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2개월, 4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지역사회에 정착한 뒤의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함.
  - 이를 경험한 교직원력을 가진 탈북여성을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인력으로 활용
- 북한에서 교직에 종사하였던 여성들에게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을 살린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장비, 인력 등이 갖추어진 대학 및 전문직업훈련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탈북여성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직업훈련과정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나. 현재제도의 문제점

- 현행 3주간으로 되어 있는 하나원의 프로그램만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교육시간이 부족하며, 하나원 퇴소 이후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고용 등의 계약조건의 변화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 왜곡된 정보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피해의식, 국가와 시장에 의존하는 양체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직장과 학교에서의 사회부적응에 시달리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을 교육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일관성 있는 시스템과 운영주체가 없음.

## 다. 운영방안

- 대상: 전직 교사였던 북한이탈주민을 교육인력으로 활용
  - ex) 시범사례 1: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NK교사아카데미
  - 시범사례 2: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
- 교육기관: 교육부에서 인증하는 교육기관(정규대학이나 평생교육원)을 이수한 이후 수료증 제공
- 전문직대상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인력의 활용방안
  - 새롭게 탈북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취업코칭 담당
  - 이주초기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한국사회 통합 교육 담당
  -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방과후 교육 담당
  - 탈북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교육담당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상담 담당
  -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사회통합 준비과정을 위한 가이드북과 교재개발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영역별)
- 북한이탈주민 대상 담당교육인력 양성
  - 남한사회에 정착하여 취업이후에도 최소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취업이후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직장인을 위한 야간수업과 일반일을 위한 주간수업이 동시에 병행되도록 함.

## 과제 4

## 북한이탈주민 대상 행복한 가정운영

### 가. 목 적

- 탈북과 남한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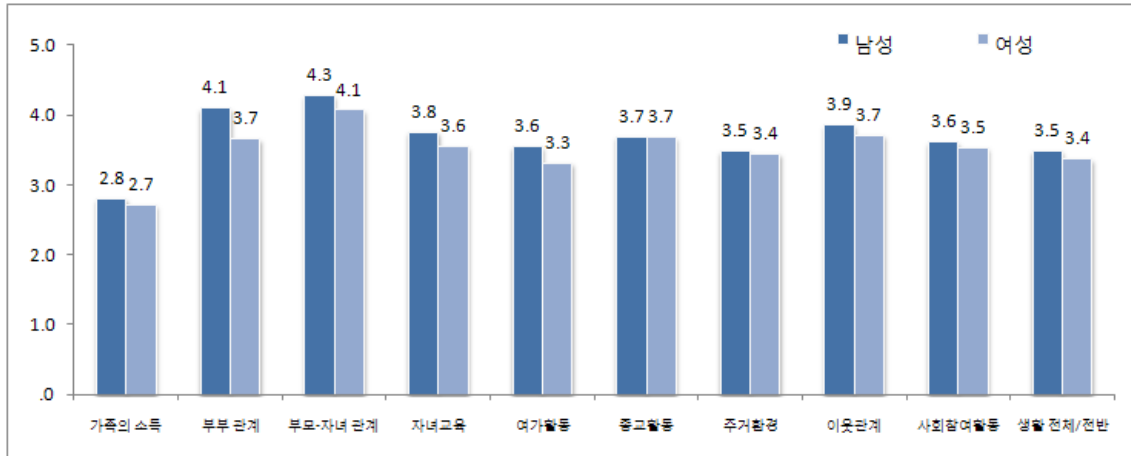
- 재의 지원정책은 개인지원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가족단위의 지원정책이 도입되어야 함.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본래 북한에 가족이 있거나 탈북과정에서 중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뒤, 입국이후 다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중혼, 재혼, 사실혼, 동거등 다양한 결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이 심한 경우가 많음.
  - 북한이탈여성의 13.7%가 이혼, 6.2%가 별거, 7.6%가 사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통일부).

〈표 4〉 현재 혼인 상태

(단위: 명, %)

	미혼	결혼	이혼	별거	사별	기타	전체
남성	155 49.2	101 32.1	32 10.2	4 1.3	8 2.5	15 4.8	315 100.0
여성	338 38.2	293 33.1	121 13.7	55 6.2	67 7.6	11 1.2	885 100.0
전체	493 41.1	394 32.8	153 12.8	59 4.9	75 6.3	26 2.2	1200 100.0

- 남한에서의 불안정한 취업상태와 남북 간의 가족문화의 차이, 건강, 자녀의 사회부적응 등으로 인해 남한에서의 가족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음.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북한과 다른 남한과의 의사표현방식의 차이, 문화의 차이로 인한 협상과 타협의 미숙, 북한출신 남성의 가부장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많은 가족이 가족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부관계의 경우 남성은 4.1점인데 반해 여성은 3.7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남녀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탈북여성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은 여러 단계의 생애주기의 가족구조의 변화를 경험하는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원 퇴소이후 거주하게 되는 지역과 연계되면서 가족단위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함.



주 : 평균은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5점에 가까울 수록 '매우 만족'임.('해당사항없음'에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평균임)

[그림 2] 남한 생활 만족도

#### 나. 현재제도의 문제점

- 현재 지역적응, 직업훈련 지원, 취업알선, 진학지원등의 지원정책은 있으나,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은 없음.
- 북한이탈여성의 77.6%는 남한에 가족이 있으며, 어떠한 종류의 가족도 없이 남한에는 나 혼자 없다고 사람의 비중은 전체의 22.3%에 불과함. 이러한 수치는 개인단위의 접근이 아니라 가족단위의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201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통일부).

〈표 5〉 가족형태

(단위 : %, 명)

성별	친 가족이 있다		친 가족은 아니지만 입양 또는 위탁형태의 실제 가족이 있다		어떠한 종류의 가족도 없이 남한에는 나 혼자이다		전체	
남성	73.3	(231)	0.0	(0)	26.7	(84)	100.0	(315)
여성	77.6	(687)	0.1	(1)	22.3	(197)	100.0	(885)
전체	76.5	(918)	0.1	(1)	23.4	(281)	100.0	(1,200)

- 탈북여성 중 미혼모와 편부가정이 상당수 차지하나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함.

## 다. 운영방안

-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을 배우자로 둔 남성과 여성 혹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육에 포함시킴.
  - 양성평등하며 민주적인 가정 내에서 남녀의 역할
  - 민주적인 가족 내 의사소통방식
  -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와 소통의 증진,
  - 가족폭력 발생시의 남한사회에서의 법적인 제재와 내용
  - 부부간의 상호존중감의 증진, 자녀와의 의사소통증진 방안
  -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
  - 탈북과정에서 이혼과 중혼, 사실혼관계에 놓인 탈북여성들에 적절한 결혼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률적 자문제공
  -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탈북여성이 이혼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소송진행 여부에 대한 법률상의 자문 제공.
- 우수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행복한 가정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전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나센터,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중에서 지정해서 위탁운영
  - 선정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대상으로 숙박비, 식비, 교통비 지원
  - 교육을 위한 강사비, 사례발표비, 프로그램 참가시간 중 아이돌보미 비용 지원
- 탈북여성중 미혼모나 편모등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 실시
  - 하나원 퇴소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시켜 취업관련 상담설시및 취업알선
  - 하나원 퇴소 당시 청소년기 한부모인가를 파악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합지원체계와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24세 이하의 한부모이면서 최저생계비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의 장녀양육 특별지원 및 조기자립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로 추가양육비 자녀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에 북한이탈주민중 한부모인 경우도 확대 적용.
- 가정폭력방지시설 중 일부 시설을 탈북여성대상 시설로 지정
  - 탈북여성 중 본인이 시설입소에 동의하는 하는 경우 시설입소를 통한 수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미혼모와 편부·편모가정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 가. 목 적

- 정착지원금이 줄어든 2005년경부터 20-30대 젊은 여성 중에서 성매매 및 유흥업 종사자가 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탈북여성= 성매매라는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해옴. 그러나 지속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구체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시점임.
- 북한에서 자본주의사회의 성매매와 성의 상품화가 만연되어 있다는 교육을 받아서 성매매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간주하는 젊은 탈북여성들이 많은 실정임. 특히 탈북여성들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성매매산업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움.
- 국경지역에서의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단속이 심해지자 여성의 경우 탈북을 도와준 뒤 북한의 경비병, 중국의 탈북브로커들이 합동으로 취업을 미끼로 감금시켜 성매매산업(화상채팅)에 종사하게 하게 방식의 탈북여성을 성매매사업으로 유인시키는 경로가 형성중임.
- 하나원 퇴소 이후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과 연계시켜 성매매경험이 있는 탈북여성의 자활과정을 지원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성매매사업으로의 재유입을 방지하여야 함.
- 그러나 탈북여성 전체가 성매매산업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므로 한국인들에게 탈북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이 찍힐 경우 나머지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정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적인 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시간 내에서 성매매방지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 나. 현재제도의 문제점

- 대부분의 탈북여성들은 한국사회가 성적 자유만 보장된 사회라고 북한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성매매가 불법이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미약함. 성매매 관련 영상이나 법적 제재의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줌으로서 가 아니라 이와 동시에 성매매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따른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 1,400명 대상으로 12회의 여성특화교육 실시하고 있음(통일부 2010 계획). 현행 5시간으로 되어 있는 하나원의 성매매방지교육을 통해서는 성매매 행위로 인한 법률상의 제재, 건강상의 휴유증, 원만한 가족생활의 유지, 정상적인 사회 복귀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적절하게 교육되고 있지 않음. 현재 교육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 필요
- 우선은 하나원의 교육단계에서 성매매 피해 또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탈북여성에 대한 기존의 여성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 성매매집결지 <열린터>

#### 다. 운영방안

- 탈북여성 중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쉼터로 연계해서 보호하게 함.
  - 현재 총 18개소의 이주여성쉼터 중 2개소를 탈북여성 보호시설로 위탁지정..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 인도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
- 하나원 입소 시에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과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하나원 퇴소이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One-Stop)자원센터와 연계시켜 성매매로 인하여 얻게 된 질병(정신과 질환 포함)치료를 지원
  - 하나원 퇴소 이후 현재 여성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치료회복프로그램과 연거시켜 상담치료와 성교육, 법률교육, 건강교육, 진로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함.
  - 업주와의 선불금을 포함한 빚 문제 등 민·형사상 해결과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 자문 및 소송관련 비용의 지원
- 성매매 예방교육 횟수 및 시간의 연장: 양성평등교육원에 성매매방지교육 5시간으로 되어 있는 현행 하나원의 성매매방지교육 시간 연장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 필요
  - 성매매사업으로부터 자활에 성공한 탈북여성을 주제로 한 동영상제작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교육
- 성매매산업에서 새로운 직업으로 전직해서 자활에 성공한 모델사례공모 및 홍보의 강화
- 직업훈련(진학 포함) 등을 통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취업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 직업훈련수당 및 생활비 지원

- 스스로 의료·법률적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탈북여성대상으로 취업과 진학 및 기술 교육 실시
- 자활지원센터에서 지원되고 있는 직업훈련수당 지원, 전업 및 사회통합 지원, 일자리 제공 사업, 의료·법률지원사업의 수혜범위를 성매매 경험이 있는 탈북여성에게도 확대

## 과제 6

## 북한이탈 청소년과 자녀 도움 프로그램

### 가. 목 적

- 2009년 현재 탈북 청소년은 1,478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자녀들은 이질적인 체제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경험하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이들이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성장한 뒤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여 한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복지서비스와 자립능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함.

〈표 6〉 남한에서의 교육수준

(단위: 명, %)

	없음	미취학	중등 재학/ 졸업	고입 검정 합격	고등 재학/ 중퇴	고등 졸업	대입 검정 합격	대학 재학	대학 중퇴	대학 졸업	대학원 재학/ 졸업	전체
남성	225 71.4	0 0.0	4 1.3	2 0.6	6 1.9	7 2.2	2 0.6	45 14.3	2 0.6	17 5.4	5 1.6	315 100.0
여성	732 82.7	1 0.1	1 0.1	1 0.1	7 0.8	14 1.6	5 0.6	99 11.2	6 0.7	14 1.6	5 0.6	885 100.0
전체	957 79.8	1 0.1	5 0.4	3 0.3	13 1.1	21 1.8	7 0.6	144 12.0	8 0.7	31 2.6	10 0.8	1200 100.0

〈표 7〉 남한에서의 교육수준(누적 비율)

(단위: 명, %)

	남한에서 교육받은 사항없음	중등이하	고졸	대졸이상	전체
남성	71.4(225)	3.8(12)	17.8(56)	7.0(22)	100.0(315)
여성	82.7(732)	1.1(10)	14.0(124)	2.1(19)	100.0(885)
전체	79.8(957)	1.8(22)	15.0(180)	3.4(41)	100.0(1,200)

- 북한이탈과정에서 탈북여성을 어머니로 외국인을 아버지로 둔 경우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받지 못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나. 현재제도의 문제점

- 학교교사,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사업종사자들과 지역주민들의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이들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매개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함.

#### 다. 운영방안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수혜자로 북한이탈청소년 및 탈북여성의 자녀들까지 확대
  -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문상담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북한이탈주민가족 대상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현재 여성가족부에 구축되어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CYS-NET과 연계시켜 북한이탈주민 가족내의 청소년의 사회통합 지원
  - 현재 학업중단, 농어촌다문화위기 가정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지역 사회 청소년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상담과 긴급구조를 하고 있는 제도인데 대상자에 탈북청소년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탈북여성이 동반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
  - 한국어교육지원(특히 한국어가 서툰 중국체류 시 출생한 탈북여성의 자녀포함)
  -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언어지도사를 보육시설에 파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에 언어교실을 개설하고 있는데,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에도 동일한 서비스 제공

- 방문교육을 통한 취학 및 학습 지원
- 탈북여성의 취업 시 보육료 지원

## 과제 7

## 준고령 북한이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 가. 목 적

- 대부분의 탈북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상태는 남성은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이 37.5%(경제활동인구 비율 62.5%)이고 실업자가 14.9%, 취업자가 47.6%로 취업자비율이 높음.
  - 여성은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이 55.7%(경제활동인구비율 44.3%), 실업자가 18.4%, 취업자가 25.8%로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이 절반 이상이었고 실업자 비율도 남성 보다 3.5%나 높음<sup>4)</sup>.
  - 수치를 통해서 보여지는 탈북여성들의 경제활동상태는 우리나라 20대 이상 여성들의 경제활동비율보다 낮고 실업은 높아 특히 탈북여성들이 남한사회에서 경제활동에서 격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8〉 경제활동 상태

(단위 : %, 명)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전체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및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남성	43.2(136)	4.4(14)	0.0(0)	14.9(47)	37.5(118)	100.0(315)
여성	24.6(218)	1.0(9)	0.2(2)	18.4(163)	55.7(493)	100.0(885)
전체	29.5(354)	1.9(23)	0.2(2)	17.5(210)	50.9(611)	100.0(1,200)

-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이 초기정착과정에 노동시장 진입과정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남아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중요함.

4) 통계청 발표 2009년 20대 이상의 성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79.6%, 여성 52.6%이며 실업률은 남성 4.0%, 여성 2.9%이다. (통계청, 「200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 통합적 고용지원서비스의 요점은 공공취업전문가가 담당 탈북여성을 전담하여 탈북여성의 전직과 노동경험을 고려하여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국직업세계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을 비롯하여 진학, 직업체험, 자격정보, 직업훈련, 취업알선, 재직자 훈련 등에 개한 진로 및 직업상담을 망라하는 통합적인 직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음.

## 나. 현재제도의 문제점

- 한국사회를 체험하기 이전 입국직후 하나원에서 실시되는 직업훈련을 현재 ‘단기집중훈련’ 위주로 되어 있음. 이 시기의 전반적인 한국사회에서의 적응향상을 위한 교육위주로 구성하고, 퇴소이후 개인의 적성과 경력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화되고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잦은 이직과 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유입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2010년 5월부터 실시된 하나원에서의 단기집중 직업훈련의 특징은 4직종 중 한 가지만 훈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인에게 직업훈련선택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 개인의 적성과약, 직종의 선택, 직업 훈련 및 취업 준비, 취업, 직장 생활 적응, 취업 동기 고취 등이 필요하나 맞춤형 고용지원이 행해지지 못함.
- 탈북여성의 연령상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화된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과 취업알선이 필요하나 지금은 일률적으로 몇 가지 한정된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기회만 제공되고 있음.
  - 노동능력이 취약하고 새로 배우는 능력이 떨어지는 40대 후반이후의 탈북여성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 경험을 통해 남한사회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
  - 20~30대의 경우는 일단 원하면 외국인 대체인력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분야에서 낮은 임금의 일자리 일지라도 구할 수 있으나 40대 후반이후는 식당일 외에는 이조차 어려운 형편임.
- 탈북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회적 취업알선에 그치지 않고, 부적응시 재취업교육 프로그램의 제공과 취업알선이 이루어져야 함.
- 개인의 적성과약, 직종의 선택, 직업 훈련 및 취업 준비, 취업, 직장 생활 적응, 취업 동기 고취 등이 필요하나 현재는 맞춤형 고용지원이 행해지지 못함.
  - 맞춤형고용서비스가 가동되기 어려운 이유로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에 있어서 주무부처(통일부)와 실행과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전문부처(고용노동부)간에 법적 권한과 수행자의 책임이 괴리되어 있기 때문임. 구조적으로 탈북여성의 고용지원서비스체계가 실

질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음.

- 2010년도 통일부는 하나센터에 취업률제고를 위한 실적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현행 하나센터와 찾아가는 전문상담사 제도, 정착도우미 제도의 목표는 지역적응과 정착임. 또한 하나센터 등에서 현행 체계 하에서는 임시적인 취업알선을 한다 할지라도 직업지도에 관한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등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하나센터에 무리한 취업지원을 요구할 시에는 오히려 지역적응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현행 정착지원법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에 위탁하여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시행하고 있음. 현재 직업훈련 상담과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이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권한이나 행정상의 재량권이 거의 없어 고용지원금 서류 하나까지 하나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며 고용지원센터 내의 기피업무로 되어 있음.

#### 다. 운영방안

- 2009년도 현재 72개소로 운영되고 있는<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집중거주하고 있는 경기와 서울지역의 3개를 지정해 경력단절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동행면접, 새일여성인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 대부분의 탈북여성들이 언어와 의사소통방식의 차이와 자본주의적 기업문화와 노동강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취업한 이후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취업 후 성공적으로 직장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탈북여성을 고용하는 기업내 관리자 멘토링 실시, 심포지움 개최등을 통해서 탈북여성의 특성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도 필요함.
-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이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근로능력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함. 준고령 탈북여성의 경우 사회적 돌봄서비스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탈북자의 육아나 보육, 간호요양 분야 등 돌봄노동분야에 종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여성부 차원에서 종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탈북여성이 북한체류시 낳아 정책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음.

## 과제 8

## 탈북여성 대상 보육지원서비스의 제공

### 가. 목적

- 탈북여성의 특성상 자녀를 돌봐줄 남한에 있는 가족이 없거나 숫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친정이나 시댁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움. 집안 일을 하면서 직장 일을 병행하기가 어려움이 27.0%, 일하면서 자녀를 돌보기가 어려움. 24.7%로서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탈북여성을 위한 보육지원서비스는 없는 실정임.
- ‘지난 일주일동안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로 여성의 14.7%가 육아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상당수의 탈북여성이 자녀를 돌보면서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통일부) 이들에 대한 보육지원이 탈북여성의 잦은 노동시장 퇴출과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음.

〈표 9〉 지난 일주일 36시간 미만 일한 이유

(단위 : %, 명)

	정규근무 시간이 36시간 미만	일시적 질병이나 사고	휴가, 교육	육아(자녀 를 돌봄)	집안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기타	전체
남성	21.1 8	10.5 4	10.5 4	0.0 0	0.0 0	7.9 3	50.0 19	100.0 38
여성	21.1 20	15.8 15	8.4 8	14.7 14	1.1 1	6.3 6	32.6 31	100.0 95
전체	21.1 28	14.3 19	9.0 12	10.5 14	0.8 1	6.8 9	37.6 50	100.0 133

### 나. 현행제도의 문제점

- 현행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사업은 개인위주로 되어 있어, 어린 아이의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단위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북한이탈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정책도 없으나 북한이탈주민중 여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현재 다문화가족에 출산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

는 점을 동시에 감안하여 볼 때, 탈북여성의 모성보호정책도 실시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여짐.

## 다. 운영방안

- 북한이탈주민을 어머니로 둔 경우 국적과 무관하게 양육비 지원
  - 한국사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출생하여 무국적이거나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가족의 도움일 받기 힘든 탈북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 서비스 제공

## 결론

### 집단별로 분화된 정책을 통한 한국사회 정착방안

- 현행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에 대한 정착지원 위주로 되어 있으나, 많은 경우 탈북과 한국사회의 정착과정에서 가족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상태를 고려할 때, 가족단위의 정착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한국사회 정착에 보다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여짐.
- 지역사회에 들어온 탈북여성들에게 사회적응-지역정착지원+고용지원+보육지원이 통합된 정착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정부부처간 영역별 역할분담과 중첩되는 업무의 조정이 요구됨.



[그림 3] 탈북여성의 고용지원모델과 서비스 전달체계

- 초창기 정착단계에서는 많은 지원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는 반면에 하나센터의 1년간의 적응지원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거의 모든 지원정책이 중단됨. 남한사회에서의 정착이 완료되지 않은 이후의 시기는 탈북여성의 남한사회 정착지원에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탈북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전문직고학력 여성집단, 탈북여대생집단은 탈북여성 집단의 현재의 중심이자 미래 리더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함.
  - 그간 대학원 과정생에 대한 장학금지원은 뜻있는 교수 및 학교측의 배려에 힘입어 이루어지다보니 탈북자출신 대학원생들은 북한대학원이나 특정 전공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임.
  - 대학원과정 지망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공개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별도의 대학원과정 장학금기금을 마련하여 대학시절에 우수한 성적이나 리더십을 발휘한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공개선발하여 북한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석박사학위자가 배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이들을 향후 탈북자 집단의 리더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유흥업 종사자 등 특수취약계층에게는 법적 제제강화와 취약계층에게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라는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함.

◆ 발표 2 ◆

| 여성정책포럼 | 탈북여성의 사회통합

# 탈북여성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

김화순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탈북여성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

김화순\*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의 동향
3. 국내 정착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 가.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적자립
  - 나. 정착과정별 전달체계의 개선
  - 다. 집단별 정책지원방안의 마련
4. 탈북여성의 집단 및 정착단계별 사회통합 세부전략
  - 가. 집단별 세부전략
    - 1) 고학력전문직 집단
    - 2) 여대생집단
    - 3) 유흥업 등 취약집단
    - 4) 40-50대 여성집단
  - 나. 정착지원 단계별 세부전략
    - 1) 1단계: 정착준비기
    - 2) 2단계: 지역사회 적응기
    - 3) 3단계: 사회통합 준비기
    - 4) 4단계: 보호종료후 사회통합

참고 문헌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02-3277-4357, odry2003@naver.com.



## 1. 문제 제기

- 탈북여성의 사회통합 문제 대두
  - 탈북 이주민 중 특히 여성비율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2000년 이래 해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2002년에는 625명을 기록함으로써 남성입국자 수보다 많아졌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은 거의 8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탈북자들의 노동시장 통합 부진 원인의 하나로 탈북여성의 증가가 지목됨.
  - 탈북자들의 입국양상 중에서 2000년대 들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가족형 이민과 이민자 수에 있어서 성별 격차임. 즉, 탈북여성이주민 수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
  - 특히 여성의 입국이 2002년을 기점으로 성별격차를 벌리면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여성이주민들이 탈북이주민사회의 주력계층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됨.
- 탈북여성의 계층별 다양성,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사회통합전략이 필요함.
  - 상당수 탈북이주 여성들은 난민상황에서 생존전략의 하나로 국제결혼을 선택, 그 부산물로서의 다문화가족을 구성하게 되었고, 그 삶의 기구함과 복잡다단함은 현재까지 많은 영향을 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음.
  - 중국내 북한난민으로 겪었던 사회적 고통이 남한에서의 삶에 계속 투영되면서 이주 후에도 계속적인 정착의 어려움으로서 작용.
  - 다른 이주민(결혼이민, 노동이민)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보다 섬세하고 인적 자본 및 정착기간 등을 고려한 사회통합 전략이 필요함.
- 본 연구는 탈북여성의 계층별, 정착기간별 사회통합 추진전략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선행 연구의 동향

### (1) 탈북여성 연구의 개관

- 탈북여성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대한 젠더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이제 시작한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음. 본 연구의 범위가 한국에 온 이후의 정착과정 이후로 시기를 한정하므로 본 글에서의 선행연구 소개도 국내정착연구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자 함.
- 해외 탈북여성 문제는 탈북과 제3국 체류과정이 신분문제, 인권문제, 난민지위 문제 등 국제관계, 불법체류중 가족의 구성, 안전과 생존을 위한 혼인관계의 성립, 매매혼

혹은 여성의 성착취 등과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

- 인신매매, 매매혼 등 성적피해의 문제
  - 성을 통한 신변안전의 확보
  - 법 외의 혼인관계 성립 및 가족구성원의 다문화
  - 난민지위 인정 등 국적과 신분안전의 문제
  - 북중관계, 한중관계, 조선족과 북한사람 등 국가간 국제외교관계의 반영
- 그간 해외 탈북여성연구는 ‘여성의 성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됨.

○ 반면, 기존 국내정착 탈북여성 연구는 해외 탈북여성 연구와는 달리 젠더관점의 연구가 아니라 “탈북자의 적응과 지원”이라는 범주 안에서 다루어짐. 2010년도 현재 국내정착 탈북여성 연구는 심리, 가족, 직업 등 각 분야별로 분화하여 진전되어가고 있음.

- 탈북여성의 국내 정착연구는 그간 적응론의 패러다임 하에서 심리·건강 적응연구, 경제적 적응연구, 가족관계(부부/자녀관계) 등의 각 분야에서 탈북자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탈북여성들의 실태가 파악되어 옴.
- 최근 탈북여성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중요성도 더불어 부각됨.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 및 실태조사가 2009년도를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박순성 외, 2009; 김석향 외, 2009; 장명선·이애란, 2009; 고지영, 2010), 심리, 가족, 직업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면서 각 연구가 진전되어 가고 있음.

## (2) 선행연구의 분류

선행 탈북여성의 연구 분야는 크게는 인권 및 해외실태 분야와 적응론을 중심으로 하여 건강·심리적 적응분야, 경제적 적응, 가족적 적응을 연구한 국내 정착분야로 대별하여 볼 수 있음.

### 가. 인권 및 해외실태 분야

- 해외실태 분야는 탈북여성의 중국에서의 생활체험 분석 및 성매매, 탈북 동기 등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 탈북여성들의 인권상황을 구술생애사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함. 탈북여성의 상황을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 문화적 현상으로 파악함(박순성 외, 2009).
- 북한사회 내에서의 젠더 박해, 사적 공간에서의 일상적 박해, 정치범 수용소의 성고문 및 강제낙태, 여성월경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연구함(민지원, 2003).
- 그 외, 탈북여성들의 중국에서의 삶의 체험을 문화인류학적 방법과 해석학적 현상학의 방법을 이용하여 안전을 위한 결론, 조선여자로서의 모욕감, 중국생활의 의미 재발견, 결혼하기/임신 보류하기 등의 주제를 도출함(장수현, 2003; 김태현·노치영, 2003)

## 나. 국내 정착 분야

### ○ 여성탈북자가 겪는 적응과정의 각종 어려움에 관한 연구

- 가족, 심리, 경제적 적응에 관한 어려움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 적응론적 시각에서 포괄적인 접근을 한 연구로는 이금순(2006)의 연구가 있음.
- 부부문제 및 중혼과 동거와 관련된 문제, 남한남성과의 결혼생활, 자녀교육 문제 및 부모봉양과 영유아 자녀교육, 직업훈련 및 직장생활의 어려움. 건강 및 심리적 어려움. 북한잔류가족에 대한 불안 등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조명한 조영아·전우택(2005)의 연구가 있음.

### ○ 심리·건강 적응분야의 연구

- 탈북여성이 심리적 신체적 건강은 매우 취약함. 이는 북한 내 혹은 제 3국에서의 체류 경험 중 겪었던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짐(조영아, 2004).
- 심리분야에서는 탈북여성의 적응이 난민적 특성을 갖는지 아니면 이민자적 특성을 갖는지의 문제가 연구의 중요한 쟁점임. 즉, 정신적 외상증후군과 문화적 적응스트레스 중 어떤 요인이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명제로 논의되어 왔음.
- 정신적 외상증후군이 북한과 중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과 탈북이나 중국체류 시 겪었던 사건의 충격을 상징하는 반면, 정착과정에서 겪는 남한사회에서의 편견과 차별, 취업의 어려움 등은 문화적응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함. 홍창영(2004)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추적연구를 3년간 하였는데, 88.8%는 자연 회복함. 조영아의 우울수준 예측연구에 의하면 입국 후 3년 동안 우울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보다 우울/불안 등이 적응에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조영아와 김연희는(2010) 정착초기 탈북여성 401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 고위험군 요인을 예측하는 연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보다 우울/불안이 적응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 여성 실태조사 및 직업

- 2009년도를 기점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의 진로 및 직업결정에 관한 연구주제가 분화되고 있음.
- 탈북여성들의 애로사항과 정착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한 여성부 보고서(김석향 외, 2009)가 있음.
- 서울시에 거주하는 탈북여성들의 가족, 경제실태에 대한 최근 보고서로는 서울시 가족여성연구원의 보고서가 있음(장명선·이애란, 2009)
- 탈북여성의 직업가치(박정란, 2006), 진로결정과정(박정란, 2009), 탈북여성의 진로장벽(노연숙, 2010; 전연숙, 2010)에 관한 논문들이 있음.

- 탈북자 취업문제의 핵심쟁점 중 첫째는 고실업과 낮은 경제참가율의 원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임.
- 고실업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현재의 정착지원체계가 복지중심체계(기초법)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탈북자 자신의 인적자본이 낮아서, 노동시장의 분절성 때문에 라는 세 가지가 지적되고 있음.
- 많은 탈북자들이 고실업과 낮은 고용율의 원인으로 남한사람들 혹은 고용주의 차별을 지적되고 있으나 이는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못함.
- 또한 탈북여성들의 고용형태나 지위가 탈북남성들에 비해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탈북 여성들이 더 차별받는지 여부도 젠더적 시각에서는 중요한 쟁점일 수 있으나 이 역시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사안임.
- 결론적으로 탈북자 혹은 탈북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문제는 현재 입증되지 못하지만 많은 탈북전문가들에게 매우 신빙성있게 받아들여지는 이유임.
- 노동시장 차별의 결과는 종종 고실업으로 나타남. 현재 고실업으로 보아 탈북자 노동 시장에서의 일자리 차별, 저임금 상황으로 미루어 직종차별 혹은 배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규명된 연구는 없음.
- 유지웅(2006)은 선행조사결과들을 종합하여 탈북자들의 노동시장 상황을 볼 때, 사회적 배제의 진행되었다고 결론지었으나, 탈북자의 인적자본이 남한주민에 비해 낮기 때문에 노동경제학의 유력한 이론인 인적자본이론의 관점에서는 이를 학력과잉이나 차별로 결론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 단지 탈북자 일자리의 특성 즉 직종별, 업종별, 임금수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탈북자의 일자리가 주로 저임금 직종군에 속해 있고 탈북자들이 주로 제 2차 노동시장에 속한다는 연구결과(김화순, 2009)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 차별의 결과인지 저인적자본으로 인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되지 않음.
- 가족관계 및 자녀교육 분야
  - 다른 적응론적 관점의 연구처럼 탈북자의 가족문제역시 여러 어려움과 부적응현상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오다가 강점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함.
  - 이순형 외(2006)은 적응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되 레실리언스(적응유연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탈북자 가족들의 적응력과 강점을 연구함
  - 그 외에 탈북여성의 자녀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로 최근 박정란(2010)의 연구가 있음. 윤여상 외(2005)의 설문결과에 의하면 자녀교육상의 애로는 교육비 과다(46.3%), 교육 정보 부족(11.7%), 대화부족(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남한부모들과 비슷하나 정보가 더욱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됨.

- 향후 통일시 나타나게 될 남·북한사람간의 결혼생활에 대한 연구로서 여러 문화를 가진 여러 쌍의 부부생활의 일상사를 연구한 질적 연구가 있음(이민영, 2006).

### 3. 국내 정착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 가.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정책 증진방안

최근 일자리대책은 취업우선전략으로 교육정책정책에 있어서 탈북자의 경쟁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급하게 정책방향이 변화하고 있어 향후 탈북여성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됨.

○ 탈북여성의 정착문제를 인력의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

- 2010년 통일부 일자리 대책에서는 하나원에서부터 직업훈련 종목을 단일화하고 취업 박람회 개최하는 등 취업우선전략으로의 선회가 일어나고 있음. 이와같은 변화의 조짐은 특례입학과 직업훈련의 강조 등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하던 정책에서 취업우선정책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임.
- 최근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대학입학과 직업훈련의 여건이 경쟁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탈북대학생의 비율은 1000명으로 이 중 여성 비율은 600-700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됨. 최근 4년제 대학에서는 탈북자 대학생의 입학시 수능등급을 고려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는 추세임
-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중심으로 하는 등 탈북자들은 달라진 정책여건에 적응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됨.
- 탈북여성들은 북한에서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으며 북한에서의 생활과 제 3국에서의 체류생활로 인해 건강의 취약성, 육아와 결혼, 학업, 돈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큼.
- 탈북자 집단에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탈북자 집단의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 나. 정착과정별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 정착지원제도의 과정별 전달체계의 개선으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부처간 영역 조절 필요
  - 정착경로별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착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사회적응교육-> 지역적응 ---> 직업훈련이나 교육 ---> 직업---> 직장적응  
----가정생활의 안정화-----
  - 이와 같이 과정별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정착지역에서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부처간, (통일부-행자부-고용노동부-여성부) 협치와 민간과 관간의 수평적인 파트너십의 형성이 요청되나 현재는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그간 지자체로 탈북자 사업을 이양하자는 주장(북한시민인권연합 주최 심포지움, 2007)과 지금은 시시상조라는 주장(민간단체연대 성명서, 2008.6)이 대립된 바 있음.
- 하나센터도 지자체와 통일부가 운영재원을 공동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러 이견으로 인해 지자체 지원없이 통일부가 단독으로 재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하나센터에서는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탈북자의 법률적 지원활동에 진력해온 민간 전문가 단체인 대한변협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조로 해서 탈북자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전문부처인 교육부-고용노동부 등과 공유하는 대한변협안을 법안으로 만들어 제출한 바 있음(대한변협 공청회 자료집, 2009)

## 다. 집단별 정책지원방안

- 선행연구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으로서 계층별, 성별, 집단별 특화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왔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조하여,
  - 탈북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전략적 과제를 선정하되 그 중에서도  
고학력자 전문직 집단  
남한의 대학생  
유홍업 등 특수취약집단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세분화하여 실태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4. 탈북여성의 집단 및 정착단계별 사회통합 세부전략

### 가. 집단별 세부전략

#### 1) 탈북여성 고학력·전문직 집단

- 각 집단별 세부전략을 세우기 위해 선행연구 및 문헌검토와 집단별 FGI(Focus group interview) 등을 수행하였음.

- FGI 주제: 전문직·고학력집단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안

- 전문직 고학력자의 세부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아래의 사람들을 FGI회의에 초대하여 고학력 집단의 정착실태와 대안에 대해 관련내용을 청취한 후, 내용을 분석하였음.

FGI 참가자

참가자 A(여성탈북자, 전 북한과학기술원 직원)

참가자 B(여성탈북자, 전 교사)

참가자 C(남한주민, 탈북여대생 지원단체 실무자)

- 탈북자 전문직·고학력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10년도 현재까지 김화순(미간행)의 연구가 유일하며, 이 논문과 관련 문헌(이미경, 2009) 및 본 연구팀의 FGI를 참조로 하여 전략과제를 설정함.

- 일반 현황 및 문제점

- 탈북여성 전문직·고학력집단이 한국사회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문제는 북한에서의 학력이나 경력 및 자격증이 설사 국가에서 법적으로 혹은 국가기관에서 인정되더라도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실효성이 없어 동일직종으로 취업하지 못한다는 점
- 탈북여성 전문직·고학력집단은 북한에서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혹은 졸업이후에 전문직에 종사한 여성들을 가리키며 전체 탈북여성 중 4% 정도로 추산됨(표 2, 표 3 참조).
- 북한의 전문직은 남한과 직업위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 논쟁의 소지는 있으나 의사, 약사를 비롯하여 연구원, 대학의 교원, 중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당원, 당비서, 행정일꾼, 기업소의 부기 등을 가리킴

〈표 1〉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학력별 현황('09년 12월 현재)

구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	전문대	대학이상	기타 (불상)	합계
남(명)	242	74	481	3,520	475	682	299	5,773
여(명)	249	85	645	9,083	1,117	675	334	12,188
합계(명)	491	159	1,126	12,603	1,592	1,357	633	17,961
여성 비율(%)	1	0.5	4	50.5	6	4	2	68

출처: 통일부

〈표 2〉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시 최종 직업현황('09년 12월 현재)

구분	무직 부양	노동자 및 농장원	관리직	전문직	예술 체육	봉사 분야	군인 및 공작원	합계
남(명)	2,315	2,441	272	146	51	43	505	5,773
여(명)	6,502	4,572	85	241	111	630	47	12,188
합계(명)	8,817	7,013	357	387	162	673	552	17,961
여성 비율(%)	36.0	25.5	0.5	1.3	0.6	3.7	0.3	68.0

출처: 통일부

#### 나. 전문직 고학력 탈북여성의 문제점

“이 사회(남한)에서는 북한에서 전문직한 사람들에게 쉽게 일자리를 잡을 수 없게 해요. 일종의 남한사람들의 밥그릇 싸움이죠. 북한의 전직(前職)을 살려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에요.”

(前 대학교 교원, 39세, 평양소재 미술대학 졸업, 북한의 최상층, 핵심계층)

- 전문직·고학력 탈북자 집단이 인지하는 한국사회의 차별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김화순, 미간행)에 의하면 아래와 같음.
  - 탈북자들은 남한사람들이 일자리 영역에서 그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아예 끼워주지 않고 배제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것으로 봄
  - 연구에 참가한 고학력·탈북자 집단 10사례 중 8사례가 차별받는다고 구술하였는데, 그들이 인지하는 차별양상은 아래 <표 4>와 같음. 탈북자 집단이 차별받는다고 인지한 주된 공간은 전부 취업 시와 직장에서였고, 그 외의 곳으로 한국사회 전반과 고용지원센터를 지목함.



〈표 3〉 고학력·전문직 탈북자 사례에 나타난 차별을 상징하는 개념어

횟수	각 1번	각 2번	각 3번
추출된 개념어	스트레스, 갈등	편견, 북한, 거부, 경쟁	배제, 무시, 부정적 인식

출처: 김화순(미간행). 고학력 탈북자의 직업전환과 계층변화에 대한 인식.

- 인터뷰 결과, 고학력·전문직 탈북여성들은 주로 ‘취업 시’ 및 ‘직장’과 ‘구직 지원처’가 자신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인지함 이는 일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실태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임. 탈북자 일반과 고학력 전문직 탈북자 모두 일자리 영역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끼고 있음. 인터뷰 사례에 나타난 차별양상은 아래와 같음.

〈표 4〉 고학력·전문직 탈북여성이 인지하는 차별양상

사례ID	차별인지영역	양상	대안	개념
사례A	직장생활	한국인들의 편견 한국인들과의 갈등	시간의 경과 상호간 수용이 필요	편견, 갈등
사례B	취업	북한에서 온 탈북자		북한
	고용지원센터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북한인을 무시		무시
사례C	취업	사회와 국가의 냉대와 배제 부정적 인식		부정/배제, 국가와 사회의 냉대
	직장생활	남한사람의 밥그릇 싸움		경쟁
사례D	차별에 대한 인식 없음	차별에 대한 인식 없음	경력 없으니 특별채용	차별에 대한 인식 없음

출처: 김화순(미간행). 앞 글.

탈북자 고학력 전문직 중 여성사례만을 추출하여 작성함.

- FGI 회의결과, 전문직·고학력 탈북여성이 한국사회에서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북한학력 및 경력의 불인정’, ‘자격증의 인정’ 문제임(FGI 회의결과).
- 특히 교사, 의사의 경우는 북한에 있을 당시의 직업과 동일직종으로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음
- 의사의 경우는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여 합격한다면 의사직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보수교육을 실시 중. 2009년 현재까지 의사고시를 통과한 11명의 탈북인 의사가 배출되었으며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sup>1)</sup>

-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직을 갖기를 원하나 북한에서의 교사생활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남한의 교사로서 필요한 지식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서 문제해결이 어려움. 2010년도 현재 한겨레 학교 3명, 기타 학교 1명(수학)으로 총 4명의 탈북인 출신 교사가 일하고 있음.

○ 북한출신 전직 교사들은 전직업(前職)을 지속하기를 원하나 복귀하기는 어려움.

- 특히 탈북인 교사출신자들은 교육개발원의 NK교사아카데미에서 재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나 뚜렷한 진로가 설정되지 않음.

- 1차로 24명이 NK 교사아카데미과정에 참여하여 21명이 수료하였음.

- 수료 후, 서울시의 교육청 멘터 교육시스템에서 시간당 2만원의 급여를 받고 방과후 교사로 활동하고 있음.

- 향후 교사로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음.

○ 북한출신 고학력자들은 남한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남한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에도 취업이 어려워 실직자인 경우가 많음.

- 박사학위자로는 탈북박사 1호인 안찬일 박사를 비롯하여 현성일 박사, 탈북여성박사 1호이자 ‘용감한 여성상’을 수상한 이화여대의 이애란 박사와 원광대의 이 모 박사 등 현재 4인의 박사학위 취득자가 있음. 이들 박사학위자들은 연구원, 대학교수 등으로 재직하면서 상당히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탈북자출신 남한대학 석사과정 생 및 학위취득자의 정확한 집계되지 않아서 파악되지 않으나, 북한출신 대졸자 회원 약 150명을 확보하고 있는 탈북지식인 학술단체인 NK 지식인연대의 자체집계에 의하면,<sup>2)</sup> 현재 남한의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들

1) 북한이탈주민관련 법률에는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그러나 북한의 의료인 자격 인정이나 국시 응시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의 부족과 ‘남·북한 보건의료제도상의 차이’를 이유로 국시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7년까지 의사나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탈북자는 평양의대 출신의 고(故) 김평화 씨와 석영환(43)씨 등 5명이었으나, 2008년 4명이 잇달아 합격해 총 9명이 의사나 약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최경미(41)씨와 최 모씨가 지난달 실시된 의사시험에 동시에 합격한 데 이어 북한에서 치과의사로 일했던 이 모씨, 함북 청진대의 약학부를 나온 황 모씨가 각각 치과시험과 약사시험을 통과하였다. 평양의학대학에서 신경내과 의학을 가르치다 남한에 정착한 후 1998년 제65회 의사국가시험에 합격 후 인턴과정을 밟다 사망한 김평화 씨를 제외하고, 북한에서 의대에 재학했거나 의사로 일했던 학력. 경력자로서 남한에서 의사, 약사, 한의사가 된 탈북자는 2008년도에 총 8명으로 늘어났고, 2009년도에는 북한에서 의사, 한의사였던 탈북자 3명이 의사, 한의사 국가고시에 나란히 합격해 2009년도 현재 총 11명의 탈북의사가 있다.

2) NK지식인연대는 대졸 탈북자들로 구성된 탈북자 학술단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북한 소식을 전하는 한편, 북한 인권과 남북 문화 등에 관한 학술활동을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9월 현재 정부에 등록된 탈북자 설립 법인은 모두 15곳이다. 설립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북한인권 개선을 추구하는 법인 4곳,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법인 9곳, 학술연구 법인 2곳 등이다. 초기에는 탈북자 정착지원 목적의 단체가 주류였으나 지난 1~2년 사이에 학술연구 단체와 북한 인권 관련 단체가 속속 등장한 점이 눈에 띈다. 세계일보. 2010.09.14.

의 수는 약 40명 정도이고, 박사과정생은 약 10여명임.

- 대부분의 석·박사 과정생들은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음. 주로 언론기관, 사회적 기업, 탈북자 단체, 탈북자 지원단체, 연구기관, 방송사 등에 재직 중인 탈북자들이 취업과 병행하여 학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학업에만 몰두하는 경우는 드뭄.
- 석사학위 취득자들 중 일부는 탈북자단체, 언론사, 연구기관, 기업 등에 진출함. 최근 탈북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으나 등록금 마련 등이 여의치 않아 등록금의 반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북한학관련 대학원에 몰리고 있는 추세임(북한대학원에만 30여명이 재학하고 있음).
- 남한에서의 석사학위 취득 후 취업처가 없어 진로로 고민하고 있는 고학력자도 많음. 학위를 취득한 탈북자들은 통일관련 기관에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음(참가자 B).

○ 북한의 자격증 인정문제

- 의사, 약사 등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자격증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례들은 국가고시 수험자격증을 부여하여 통과하면 자격증을 주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으며 한의사의 경우는 북한의 의학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표 5〉 북한자격의 인정 가능한 준기사 및 기사 등급 현황

북한자격		급수	해당분야 (남한)	인정가능한 자격 및 등급
구분	자격종목			
준기사	금속	단일	금속	금속분야 산업기사
	농기계	단일	기계	농업기계정비산업사
	과수원에	단일	농림	시설원예산업기사
	행정경리(부기)	단일	사무서비스	전산회계운용사
기사	농산기사	1~5급	농림	종자기사
	연구사(육종 및 병리)	1~5급	농림	종자기사
	전기철도	1~3급	전기	전기철도기사
	건축설계원	1~6급	건축	건축기사
	항만 및 수로건설	1~6급	토목	토목기사
	설계원	1~5급	토목	토목기사
	화학	1~5급	화공	화공기사
	반도체전문가	단일	전자	반도체설계산업기사

- 그러나 그 외의 자격증은 특수한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정부기관에서 자격증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시장에서 북한자격증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고, 설사 인정받더라도 남한 노동시장에서 북한자격증의 실효성은 거의 없음.

- 이제까지 북한에서의 자격증 인정현황은 위의 <표 6>과 같으며 한국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전문자격증은 소수에 불과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자격증을 신청한 탈북자를 면접하여 인정과 불인정을 결정하고 있음.
- 그러나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35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는 북한의 자격증을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남한의 대학에 들어가 학위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임

〈표 6〉 탈북자의 취득 자격 현황

발행기관	자격증 종류
북한정부	1급 고급요리사(한식), 무선통신기사 1급, 통신선로기사 7급
대학	토목설계사 6급, 토목설계사 5급, 갯건설기사 3급
국가시험위원회	전기철도기사 1급, 발효기사 3급, 분석화학기사 4급, 채굴공학기사 5급, 편직공학기사 4급, 식품공학(발효)기사 5급, 전기설비기사 5급, 전자계산기기사 5급, 유기합성공학기사 6급, 건축기사, 철도건축공학기사 6급, 정보학기사 2급, 광산탄광자동차기사, 컴퓨터장치전문가, 정보처리기사 6급, 제강기사 4급, 철도전자자동화준기사, 전자공학기사 6급, 일용화학준기사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 다. 고학력 전문직 대책

- 전문직·고학력 여성집단은 탈북여성 집단의 현재의 구심점으로서 지원 육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함.

##### ○ 제안 1: 정부가 주도하여 북한출신 전문가DB 구축 후 취업지원

현재의 취업지원시스템은 학력간 차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학력전문직 종사자의 직업이력 및 자격DB를 별도로 관리하여 적절한 취업처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 고학력전문직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집단임. 교사를 다시 하는 것은 무리이나 이들이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고급사무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고 취업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전문직 종사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이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관련회사와 연결 필요.

##### ○ 제안 2: 사회적 인지도 높고 신뢰받는 기관에서 재교육 후 자격증 부여

자격증을 줄 경우 신뢰받는 대학, 기관과 연계하여 상당기간의 재교육프로그램을 거친 후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함(참가자 C).

- 북한의 자격증 등을 정착지원법에서 규정한 보수교육 규정은 현재 사문화되고 있는데,

재교육을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신뢰할만한 기관에 의뢰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 **제안 3: 탈북여성 교사인력을 탈북성인 역량강화 및 비보호아동 등을 돌보는 탈북자 관련 교육기관에서 활용**

○ **제안 4: 전문직고학력 출신 탈북자 인력을 활용하여 통일대비와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잡는 탈북자 희망프로젝트의 개발**

- 현재 남북언어사전에 대한 장기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이와같은 유사한 성격의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전문직고학력 탈북자들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중장기 정부프로젝트의 개발이 필요.

통일을 대비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다는 자긍심을 탈북자 사회가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 탈북자 사회는 무엇보다도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자긍심과 희망이 필요함.

○ **제안 5: 경기도의 지자체 공무원 입직사례의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 확산**

- 고학력전문직 탈북여성들의 탈북자 사회 내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로 동화하면 설자리가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상징적 정책이 필요함. 경기도의 계약직 공무원 12명 채용은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좋은 정책으로서 고학력자 집단의 희망이 되고 있음.
-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사례를 확산하는데 협조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경우는 탈북자와 탈북여성에 대한 채용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재단에는 탈북여성으로서 경리 한명만이 채용된 상태임.
- 2010년 통일부의 채용탈북자 수가 줄어든 사례는 모범을 보여야할 주무부처가 탈북자 채용을 꺼려한다는 인상을 주어 최근 언론 등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음.<sup>3)</sup>

## 2) 탈북여대생 집단

“탈북여대생의 연령은 20-30대로서 학업과 가정생활에서의 주부와 육아의 역할, 취업이라는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삼중고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송정화, 탈북여대생, 서강대 새터민 동아리 ‘우리하나’ 회장)

- 탈북여대생집단은 탈북여성 집단의 미래 리더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함.

3) 한겨레신문. 2010. 11. 16

- 탈북여대생 실태의 문제점: 학업과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진출의 삼중고
- 입국인원대비 탈북대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서 여성대학생 수가 남성대학생 수의 2배에 달함.
  -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대학생들의 총 인원이 얼마인지 공식적인 집계는 없어 확인할 수 없음. 단, 공립대학교를 제외한 사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별 대학생 수는 아래<표 7>과 같음.

〈표 7〉 2000-2010년 사이의 사립대학교 남녀별 학생비율의 변화추이

년도	사립대 학비 보조 인원		대학생 수	대학생 비율	입국 누적인원
	남	여			
2000	58	31	89		-
2001	64	33	97	4.9%	1,990
2002	66	42	108	4.0%	3,128
2003	105	73	178	4.0%	4,409
2004	131	90	221	3.5%	6,303
2005	129	131	260	3.4%	7,686
2006	155	213	368	3.8%	9,704
2007	190	276	466	3.8%	12,248
2008	191	323	514	3.4%	15,057
2009.1 학기	211 (33.5)	418 (66.4)	629	3.5%	18,009
2010	?	?	713		-

출처: 김화순(2010a). “탈북대학생의 학업실태와 진로”.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심포지움. 2010. 8. 22.

- 사립대학교에 진학하는 대학생 수를 보면 2001년도에는 97명이던 것이 2010년도에 713 명으로서 약 8배로 증가하였으나, 이를 입국 누적인원과 대비해보면 대학생의 비율이 2001년도의 4.9%에서 2008년도에는 3.5%로 감소함. 2004-2005년에는 급격히 감소.
  - 여대생들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임. 입국시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지는 여초(女超)현상이 처음 나타난 해는 2002년도임(남, 469명, 여, 632명). 대학진학을 하는 탈북자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어 2005년도를 기점으로 여초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2009년도에 이르면 여성 탈북자 대학생 수는 남성 탈북자 대학생 수의 약 2배에 달함.
  - 여성 대학생들의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탈북대학생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
- 학업의 어려움, 가정생활의 어려움 → 높은 중도탈락률

- 국회에 제출한 자료(김애실의원)에 의하면 남한대학생에 비해서 탈북대학생들의 휴학과 제적률이 매우 높고 졸업생의 수가 10명에 지나지 않음.

〈표 8〉 서울·경인지역 사립대학 입학연도별 북한출신 대학생 현황(단위: 명)

입학년도	입학	재학	제적	휴학	졸업
2002 이전	24	0	8	1	15
2002	12	1	6	0	5
2003	41	12	14	14	4
2004	45	23	12	9	1
2005	65	38	13	14	0
2006	56	37	7	12	0
2007	56	48	3	5	0
총계	302	159	63	55	25

출처: 김애실 의원자료집. 159p. 우영호(2008)에서 인용.

- 대학에 입학한 후 탈북대학생은 중도에 제적을 당하거나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음. 그 이유는 학습출발점이 남한대학생들과 다르다는 점. 영어기초가 없다는 점, 전공 선택의 편향 및 어긋남, 전문대학이 소수만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 4년제 대학에 주로 지원하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임.
  - 특히 진로탐색을 위한 심리검사의 경우에도 남한학생을 준거로 하여 개발한 것만 있기 때문에 북한출신대학생에게는 맞지 않음. 아울러 북한출신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적성검사가 개발되어 사용될 필요성이 있음.(참가자 C)<sup>4)</sup>
- 진학정보가 제한적이어서 4년제 대학으로의 편향성 및 특정전공이 편향적 지원이 이루어짐
  - 탈북자 대학생지원의 경우 대학 측에서 1/2을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 전문대학에서 탈북여대생을 잘 받지 않아 서울시내 4년제 대학에 집중적으로 진학하고 있는데 학업수준이 맞지 않음.
  - 일부 전공에 대한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전공선택시 중국어, 복지 등 일부 전공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탈북자집단 내에서 활용가능한 진학과 진로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공선택의 범위가 좁은 것이 요인으로 작용

4) 2010년 8월 현재 한국고용정보원의 이효남 박사팀에서는 북한출신 청소년을 위한 진로검사를 개발 중에 있으며 2010년 내로 완료될 예정임. 이를 보급하는 것이 중요함.

- 남자는 경영학, 여성은 사회복지, 중국어 등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는데 최근 여성입국자가 늘면서 중국어, 사회복지학 등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대학진학 전 충분한 진로정보의 제공과 전문가의 진로지도가 이루어져 각자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전공선택과 학업가능한 대학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로상담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 9〉 탈북 대학생의 전공 변화추이(2007-2009년)

년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07	중 국 학 (중 국 어, 중국어통역)	사회복지(아동복지, 상담심리,케어복지 등)	보건의료(간호학, 치기공, 의학과 등)	미디어예술(멀티미디어, 피부미용)	경영학(글로벌경영, 금융보험학)
2008	중 국 학 (중 국 어, 중국학 등)	사회복지(아동복지, ngo, 케어사회복지 등)	보건의료(간호학, 치기공, 의학과 등)	정경학(정치경제, 부동산학, 회계학 등)	미디어예술(뷰티아트, 피부미용, 영상, 실용음악 등)
2009	중 국 학 (중 국 어, 중국학부)	사회복지(사회복지, 복지경영)	보건의료(물리치료, 간호, 치기공)	미디어예술(뷰티미용, 디지털디자인)	정경학(정치경제, 부동산학, 회계학 등)

출처: 김화순(2010a), 탈북대학생의 적응과 진로방향

#### ○ 사회진출의 어려움->대졸 고실업자의 양산

- 남한여대생들의 경우에도 남자에 비해 취업의 기회가 적으며, 한정적인 직종에 취업하는 경향이 있음.
- 탈북여성 대학생의 경우에는 북한사회의 영향으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남녀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효능감이 낮고, 대학학력을 결혼을 하기 위한 자격으로 생각하거나<sup>5)</sup>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태도가 보다 소극적이라는 관측이 있음(참가자 C)
- 중도탈락을 면하고 졸업한 소수의 졸업생의 경우에도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sup>6)</sup>
- 탈북대학생들이 남한대학생들에 비해 더욱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서, 남한사회가 지닌 편견의식도 있으나 탈북대학생들의 경우 어렵게 졸업을 했기에 직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 대기업을 선호하여 현실적인 눈높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도 고실업율의 원인으로 일부 작용

#### ○ 탈북여대생 관련대책

- 탈북여대생의 경우 석박사학위자의 전공영역을 다변화하고 각 분야별 미래 리더로 양

5) 북한여성들은 기혼 전업주부로 가정생활에 전념하다는 것이 일반적임. 탈북여성의 경우 남한출신 남자와 결혼한 후 가정생활에 전념하고자 하여도 남편과 시집에서 직장생활을 원하는 경우 자격증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송정화, p79).

6) 2000년-2007년 사이의 입국한 자유시민대학 272명 중 남한대학생출신 50명 중 졸업생의 진로를 추적한 김화순(2009)의 연구에서는 남한대학 졸업생들의 학력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졸업생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임.



성하는 것이 중요함. 탈북자 사회의 고학력현상은 취업준비율을 올릴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지만 탈북자 자신이 자신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높다는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음.

#### ○ 제안 1

**대학입학 전에 진로탐색과 진로지도가 선행하여 전공 및 대학선택의 편향성을 극복**

- 진학지도 창구마련 및 활성화.
- 전문대학이 더 많은 탈북여대생을 받도록 유도,
- 전공 선택의 다양성 유도
- 예비대학 프로그램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 제안 2: 대학입학 전, 입학 후의 영어교육지원

- 외국어 교육지원이 필요하나 탈북여대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영어교육을 받을 경제적 여력이 없음. 학업의 중도탈락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어교육의 지원이 필수적임.
- 정철어학원에서는 사회적 공헌차원에서 탈북대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외국어교육을 지원해옴. 향후 탈북대학생의 영어교육을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

#### ○ 제안 3: 계절학기 수강료 지원

- 탈북여대생들은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움. 생계비를 더 지급할 수는 없더라도 계절학기 수강료 등을 지원한다면 학업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 제안 4

**직업결정의 현실화와 직장체험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sup>7)</sup> 모델의 확산**

- 탈북 대학생들의 취업준비율이 매우 높음. 대기업만을 원하고 연봉 4000만원 이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음(FGI 참가자 C).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차라리 실업자를 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탈북 여대생역시 이런 점은 비슷함.
- 취업준비율이 조절을 위해서는 자유터와 한국정책연구원에서 지원하는 탈북대학생 인턴십프로그램과 같은 사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 대학생을 위한 보다 특화된 프

7) 자유터는 북한이탈주민 예비 대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열려진 학습공간이다([www.unischool.org](http://www.unischool.org)). 매주 월부터~금요일 저녁 7:00-9:00까지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함께 북한이탈주민 학생 각자 수준에 맞춘 개별 영어수업을 진행하며 학생의 필요에 따라 수학과 논술 수업이 진행되며 방학 동안에는 예비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교 예비 과정(수학, 생물, 화학)이 진행된다.

로그래밍 마련이 필요함. 여대생에게는 다양한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인 등과 연계하여 인턴 경험을 쌓게 할 필요도 있음.

- 자유터 인턴십 기간은 1개월-6개월임. 4년제 대학교의 경우는 2-3학년, 전문대학의 경우 2, 3년제의 경우 1 학년이나 2학년 때 인턴십을 경험. 탈북 학생들에게 인턴경험을 통해 2, 3 학년에 인턴십을 마친 후 졸업 시까지 인턴십에서 알게 된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이나 향상시키기 위한 시간을 가짐.
- 2010년의 경우 벽산건설에서는 8월 1달간 10명에게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음.
- 한국청년정책연구원도 이들에게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하는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성취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탈북대학생의 취업과 진로결정을 위한 1·2기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어 2009년 6-8월까지 1기 7명이 인턴십 참가. 2기는 2009년 11월-2010년 2월까지 총 21명이 인턴십을 참가하였음.
-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에스케이텔레콤 등 19개 업체가 인턴십 파트너로 참여해, 28명의 탈북 대학생들이 직장 생활을 경험.

#### ○ 제안 5: 우수한 탈북여대생을 각 분야의 전문가로 장기적으로 육성

- 그간 대학원 석박사과정생에 대한 장학금지원은 뜻있는 교수 및 학교 측의 배려에 힘입어 이루어지다보니 탈북자출신 대학원생들은 북한대학원이나 특정 전공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임.
- 대학원과정 지망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공개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별도의 대학원과정 장학금기금을 마련하여 대학시절에 우수한 성적이나 리더십을 발휘한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공개선발하여 북한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석박사 학위자가 배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이들을 향후 탈북자 집단의 리더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3) 유흥업 등 특수 취약집단

탈북자들만 유흥업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가더라고요. ..중략.. 회사 다녀서 한 달 백 만원씩 월급 타서 십년 동안 모아야 1억이 되는데 삼년을 부지런히 해서 육칠천 만들어서...

노래방 유흥 쪽으로 다니면 만들 수 있겠지요. 부지런히만 하면 그러면 종자돈 만들어서 금방 딱 끝내는 게 낫지.. 여기서 창업한다고 누가 도와줘요? 저는 그 방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나빠요...중략... 뭐든지 열심히 해서 부지런히 해서 종자돈 만들어서 뭐든지 하자.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탈북여성, 30대, 유흥업소. 2010. 8. 면접)

### ○ 성매매 및 유홍업 종사자 실태

- 탈북여성들의 유홍업 취업은 2003년부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2005년 정착금 삭감 이후 더욱 확산되어오고 있으나 실태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음.
- 하나원에 입소 시부터 유홍업 종사에 대한 유혹을 받고 유홍업으로 취업하기 시작하는데 이와 같은 경로가 고착화되고 있음.
- 최근에는 일본에 원정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성매매 알선자와 성매매자 모두가 탈북여성으로 탈북자집단 내에서 상호간 성의 상품화를 부추기고 있음.
- 문제의 성격상 성매매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최근 일본성매매나 보협사기단 등 탈북자관련 범죄들이 불거져나오고 있음.

### ○ 성매매 및 유홍업 종사자의 의식

- 아래 유홍업종사 탈북여성을 면접한 결과에 의하면 유홍업 종사여성의 한국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왜곡되어 있음. 윤리적 죄의식이 약하고 법적 제재에 대한 인식이 없음.

“남한사회는 성매매가 흔한 사회이다.” -> 법적 제재에 대한 인식 없거나  
법준수 의식이 없음.

“종갓돈을 모으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다.”

“나쁜 일이 아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서울 올라와서 고위직 있는 사람, 북한 사람 탈북자 담당 상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 노래방이나 유홍쪽 가서 삼년동안 정신없이 일해라, 여기는 자본주의다, 그걸 가지고 뭔가 하려면 해라. 여기는 돈 없으면 안되고, 어디 가서 우는 소리 해봤자 너 창업비용 대주는 사람 없다. 저는 이제야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았어요. 그게 확실히 맞는 말씀이세요.

### ○ 언론보도에 나타난 실태

- 탈북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사람도 탈북자로서 탈북자 상호간에 성매매를 중심으로 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음.

#### 탈북여성 일본 원정 성매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탈북 여성들을 일본으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마사지 업주 탁모(49.여)씨와 브로커 이모(44.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국내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탈북 여성들은 “일본에서 일하면 한 달에 1천 500만원을 벌 수 있다” 송

출 브로커 이씨의 꾀에 넘어가 일본에 건너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탈북 비용과 생계비를 마련하려고 마시지 업소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2010. 10. 22 연합뉴스)

#### ○ 유홍업 종사자대책

- 유홍업 종사자 등 특수취약계층에게는 법적 제제강화와 사회적 기업으로의 유도라는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함.
- 탈북여성 중 유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인지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생계형 유홍업 VS 수익형 유홍업 종사자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생계형 종사자에 대해서는 취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 직업을 알선하고
- 동료인 탈북여성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홍업에 끌어들이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법적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함.
- 하나원에서 지역사회 적응센터인 하나센터에 이르기까지 여성부의 성매매 방지 교육과 여성적인 섬세한 돌봄서비스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됨.

#### ○ 제안 1: 성매매관련 실태조사 필요

- 탈북여성들의 성매매 실태원인이 밝혀지지 않음. 정착경로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성산업종사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개체가 무엇인지에 관해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이를 위해 정확한 실상파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함.
-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탈북여성= 성매매 라는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해옴. 이제는 덮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구체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시점임.

#### ○ 제안 2: 하나원에서부터 성매매 방지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현재 하나원에서 여성부에서 주관하는 양성평등교육은 5시간에 지나지 않음.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시간증가가 절실함.
- 한국사회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에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음. 성매매 관련 영상이나 법적 제재에 따른 결과에 대해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 ○ 제안 3: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교육과 강력한 법적 제제가 필요

- 여성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성매매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없음. 탈북자 상호간 권유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므로 정착선배인 탈북여성을 고용하여 정착성공의 건전한 모델 제시를 위한 찾아가는 멘터링 프로그램도 검토할만함.

- 제안 4: 탈북여성의 성매매 예방과 종사자의 직업전환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섬세한 여성적 개입이 필요하므로 이 문제에 대한 여성부의 역할강화

통일부의 전문상담사 교육안에 성매매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성부와의 연계사업 기획을 검토할 필요 있음.

#### 4) 40대 이상의 중장년여성

- 인센티브의 차등화
  - 노동시장에서의 선호도가 낮은 근로취약계층으로 40대 이상의 중장년계층을 들 수 있으며 탈북여성 중 약 13%를 차지함. 이들은 2005년 이후의 통일부의 정착지원정책이 자활중심의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수혜가 적어진 계층임.

〈표 10〉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현황('09년 12월 현재)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합계
남(명)	350	1,008	1,597	1,481	833	271	233	5,773
여(명)	357	1,118	3,336	4,399	1,855	535	588	12,188
합계(명)	707	2,126	4,933	5,880	2,688	806	821	17,961
여성 비율(%)	2	6	19	24	10	3	4	68

출처 : 통일부

- 일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는 계층이며 일하고자 하여도 쉽게 들어갈 기업이 없음. 기업에서는 20-30대를 선호하여 40대 후반이상이 되면 탈북자에 대한 차별에 연령차별이 가세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업체에 취업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각종 장려금의 요건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임.
- 이들 40대 이상의 계층들은 연령대별로 차등화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각종 장려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이미경, 2009)
- 이와같은 요구는 일견 북한식 평등주의적 사고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취업이나 직업훈련시 주어지는 각종 장려금이 정착금을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타당성도 없지 않음. 그들은 정당하게 받아야할 정부의 보조금을 빼앗겼다는 억울한 마음과 소외감을 지니고 있음

#### ○ 근로능력의 취약성과 연령차별

- 이들 40대 이상의 계층들은 기업체가 20-30대를 원하며 자신들은 배제당하는 실정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실상과 부합함.

- 직업훈련 과정 중 독자과정에 수강하여 훈련장려금이나 자격장려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되면서 독자과정만은 줄어들 전망이어서 이들 계층의 배제는 더욱 심해질 예정임.
-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이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근로능력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함.

#### ○ 40대 후반 이상의 중장년 여성에 대한 대책

-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이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근로능력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함.
- 탈북여성의 경우 사회적 돌봄서비스 산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여성부 차원에서 종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 제안 1: 사회적 돌봄서비스 사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검토

- 탈북여성의 경우 사회적 돌봄서비스 산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여성부 차원에서 종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준고령자층 탈북여성을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은 탈북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분야와 간호요양 분야, 중국체류시 낳은 아이들을 돌보는 비법아동 지원서비스 분야 등이 있음.

#### ○ 제안 2: 여성 중심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수용

- 노동능력이 취약하고 새로 배우는 능력이 떨어지는 40대 후반이후의 탈북여성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 경험을 통해 남한사회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
- 20-30대의 경우는 일단 원하면 외국인 대체인력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 업 분야에서 낮은 임금의 일자리 일지라도 구할 수 있으나 40대 후반이후는 식당일 외에는 이조차 어려운 형편임.
- 탈북자의 육아나 보육, 간병 등 돌봄노동분야에 종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여성부 차원에서 종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준고령자층 탈북여성을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은 탈북여성들이 낳은 비법아동 보호센터 등이 있음.

### 나. 정착지원 단계별 세부전략

- 탈북여성 정착과정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음.

## 1) 정착준비기

○ 1단계는 대성공사에서 하나원 생활까지의 정착준비기임. (입국후 6개월 정도)

- 이 시기의 탈북여성이 성취해야 할 과제는
  - 한국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준법의식
  - 심리적 치유 및 건강회복

## 2) 정착 1단계: 지역사회 적응기

○ 2단계는 지역사회 적응과 진로를 모색하는 정착 1기(입국 후 6개월 -1년).

- 이 시기의 탈북여성이 성취해야 할 과제는
  - 자신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 가족통합
  - 진학 혹은 직업훈련 상담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
  - 특히 탈북여성의 경우 북한상황으로 인해 북한시절부터 가두여성화하여 대부분 직업경력이 단절된 상태로서 직업훈련이나 교육지원이 필수적임

## 3) 정착 2단계: 사회통합 준비기

○ 3단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구직활동과 구직 후 직장생활 및 결혼·가정생활 적응기인 정착 2기임(입국 후 2년차-5년까지)이며 이 시기에는 탈북자들에 대한 특별한 여러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제도적 활용이 중요함.

이 시기의 탈북여성이 성취해야 할 과제는

- 일을 체험하고(사회적 기업 등)
-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일반노동시장 진입, 각종 취업보호제도 활용)
- 자녀교육과 보육(교육지원)
- 일과 가정의 병행
- 직장적응, 창업 등(창업지원)
- 초기 적응시기에서 탈북여성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문화이질성 문제를 크게 느끼고, 점차 직무관련 문제나 근무 조건의 문제가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직업 장래성 및 관련분야 전문지식 습득 등이 중요하지만, 초기에는 직장 내 문화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가 직장생활을 통해 정착에 성공하는가를 결정짓는 관건이다. 따라서 초기 정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복적 이직과 취업포기 등으로 남한사회 정착에 실패하는 확률이 훨씬 높다(박영자, 2007)
- 초기 정착에서 직무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는 남북한의 노동강도와 노동규율 차이이

고, 직장생활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는 개인주의적이고 비협조적·경쟁적인 직장문화와 의사소통방식의 차이(탈북여성의 직설적인 화법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가운 반응들과 남한 직장인들의 간접적이고 이중적인 화법에 대한 적응부족 등)임.

- 탈북자들에게 대인관계방법과 갈등해결법 교육
- 남한기업인에 대해 탈북근로자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에 대한 컨설팅 등이 필요.

#### 4) 정착 3단계: 보호 종료후 사회통합

○ 4단계는 3단계 정착과정 속에서 사회통합력이 향상되어 생활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정착 3기임(입국 후 5년 이후).

- 모든 보호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남한주민 보편적인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응능력이 부족한 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함.
- 새로이 오는 탈북자들을 돕는 역할 및 사회봉사의식 함양, 통일에 기여
- 남한사람들의 직업관련 모임과 네트워크에 참여할 기회를 사회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



## 참고문헌

- 김석향·박영자·이미경·전영선(2007).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 직업실태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 김석향·채영실·김미주(2009). 『탈북여성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방안 연구』. 여성부 보고서.
- 김미정·정계숙(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새터민 부모의 양육이야기」. 『아동학회지』. 28:1.
- 김태현·노치영(2003).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이야기(1)::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한 중국생활체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41:8. 대한가정학회.
- 김화순(2010a). 『탈북대학생의 학업실태와 진로』.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주최. 탈북대학생 심포지움. 2010. 8.22.
- 김화순(2010b). 『2010년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대책의 쟁점과 향후 방향: 고용활성화를 중심으로』. 국회인권포럼 심포지움. 2010. 11.2
- 김화순. 『고학력 탈북이주민의 직업전환과 계층변화에 대한 인식』. 2010 집필. 미간행원고.
- 고지영(2010). 『탈북이주민의 사회적 지위와 취업요인 분석』.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원 추계학술회의. 2010. 10.
- 박순성·고유환·소라미·이임하·이희영·전미영·차문석·홍민(2009).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동국대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국가인권위원회보고서.
- 박영자(2007). 「다문화시대 새터민의 이주민과의 노동생활 비교인식: 사회통합 정책의 이념과 방향수립을 위하여」.
- 박정란(2006). 『여성새터민의 진로의사결정 연구: 북한에서 남한에 이르기까지의 맥락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 박정란(2009). 「여성 새터민의 자녀 돌봄과 일: 실태와 지원방안」. 한민족문화연구. 28; 97-135.
- 선한승·강일규·김영윤·윤인진·이영훈·정성훈·김화순(2005). 『북한이탈주민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윤여상·윤인진·이금순·안혜영·서윤희·엄홍석(2005).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 (사)북한인권정보센터.
- 윤인진·길은배·박영희·엄홍석·윤여상·채정민(2006). 『새터민 여성·청년 실태조사보고서』, (사)북한인권정보센터. 2006.12.
- 우영호(2008).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순·강신창·김병로·김수암·안혜영·오승렬·윤여상·이우영·임순희·최의철(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연구』. 통일연구원.
- 이금순(2006). 여성이주자의 사회적응과정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5:1.
- 이미경(2009). 『북한이탈주민 여성 1만명 시대의 삶의 현장』, 국회토론회 자료집. 2009.
- 이민영·김현경(2007). 「새터민 여성의 이주로 인한 상실의 극복체험: 남한 남성과 결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007. 겨울. pp.525-554.
- 장명선·이애란(2009).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여성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장수현(2001). 「중국내 북한난민의 사회적 고통: 한계적 상황과 오점만들기」. 『한국문화인류학』.

34-2: 211-236.

조정아 · 정진경.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갈등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조영아 · 김연희(2010). 『초기 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15;3 509-527.

조영아 · 전우택 · 유정자 · 엄진섭(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7:2. pp. 467-484.

진미정. 이순형(2007). 「가족특성에 따른 새터민의 사회문화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5:5

홍창형(2005).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3년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토 론 문

1. “탈북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10대 전략과제” 토론회  
-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2. 탈북여성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실천과제  
-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
3. 여성정책포럼 「탈북여성의 사회통합」 토론회  
- 최영애 (북한이탈여성지원과연대 대표)
4. 탈북여성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오태봉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과장)





## “탈북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10대 전략과제” 토론문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1. 전반적인 의견

이 글을 쓴 장미혜 연구위원은 연구목적은 세 가지로 제시하셨지만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을 지원하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장치가 그 동안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성인지적 시각을 다시 정립하겠다고 했다. 둘째, 북한이탈여성을 동질적 집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정착하는 상황을 입국 단계와 생애주기, 학력수준 등 주요 변수를 기준으로 유형화한 뒤 각 집단별 특성에 맞는 정착지원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이탈여성을 동질적 성격을 지닌 집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 내부를 관찰해 보고 각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관찰한 뒤 그 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정착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 장미혜 연구위원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자신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요인에 따른 평가가 지나치게 커서 그 이외의 다른 요인인 성별이나 학력, 경력, 생활형편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세밀한 차이점은 완전히 묻혀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무조건 굶다가 온 것으로 치부하거나 “이런 물건은 써 봤느냐, 저런 것은 먹어 봤느냐” 하고 질문하거나 그 동안 무슨 일을 했었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북한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평가하는 사례가 많아 자아존중감에 깊은 상처를 입고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정착 지원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이 지닌 특성에 따라 이들을 세분화하고 각 집단별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지원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들을 동질적 집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집단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더욱 절실한 이유는, 필자가 지적한 것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이탈여성을 개인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토론자의 의견이다. 첫째, 각자의 특성에 따라 집단 내 소집단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소집단 상황에 맞게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은 북한이탈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실천해야 할 일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이탈남성을 비롯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유형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도 각자의 특성에 따라 세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절실하고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여성을 세분화된 집단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세분화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적합한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혜집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2010년 11월 11일을 기준으로 2만 명을 넘어섰고 그 가운데 70% 가량이 여성이며 최근에는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한다고 해도 그 숫자가 과연 각자의 특성에 따라 소집단을 세분화해 놓고 각각의 소집단에 따라 세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적합한 단계에 이르렀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여성을 특성이 다른 소규모 집단으로 구분한 뒤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지원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앞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선행하지 않는다면 정책적 현실에서 자칫 공허한 외침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토론자의 느낌이다.

## 2.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

1. 필자는 글의 첫 머리에서 2010년 5월말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19,010명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료의 출처로 유옥 변호사의 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토론자는 왜 통일부의 자료를 인용하지 않고 유옥 변호사의 글을 출처로 제시했는지 의문

을 품게 된다. 사실상 필자 이외에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관련 분야에서 정부와 공공단체에서 공개한 수치가 아니라 개인의 연구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한 번쯤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필자의 의견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글은 세밀한 부분에서 몇 가지 오류가 있어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서 북한이탈주민이 4년제 대학 무시험입학제의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무시험으로 입학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대학마다 적용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일반적으로 재외국민과 함께 특별전형의 대상으로 분류되며 학교에 따라 면접 이외에 구술시험이나 필기시험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게를 지니는 사안이기도 한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토론자의 의견이다.
3. 필자는 북한이탈여성 중에서 지식인 집단을 대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를 시행하여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실제로 그런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경험이 있으신지 질문하고자 한다. 토론자는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하면서 FGI 결과에 만족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약 필자가 성공하셨다면 그 비결을 전수받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4. 원스톱 서비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정책적 현실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면 어느 정도의 자원을 투자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하고자 한다. 아마도 이런 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실 것 같은데 매년 기획재정부 실무자를 대상으로 “예산투쟁”을 하고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그 다음 해 사업의 규모와 지속성을 결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인지 필자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한다.
5. 필자가 제시하신 <표 1>에서 <표 9> 자료는 어떤 조사를 근거로 하는지 알려주실 것을 부탁하고자 한다. 이런 자료를 제시할 때 그 배경이 되는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 다소 답답한 느낌으로 글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

6. 단순한 실수이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13쪽에서 하나원의 프로그램이 “현행 3주간”이라고 한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굳이 편부-편모-편부모와 같은 표현을 쓰셔야 했는지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체로 한부모 가정이라는 표현을 더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 탈북여성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실천과제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

### 1. 탈북여성 정착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넘어 맞춤형 정착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 보완 및 개선에 기여하는 내용이 풍부함

- 특히 입국단계와 생애주기, 학력수준, 탈북 이후의 남한사회 체류기간 등을 고려한 정착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또한 탈북여성을 정책의 시혜자로서만 보지 않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접근에 기초한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됨

### 2. 발표문 내용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음

- [탈북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10대 전략과제](장미혜 연구위원)에서 제목과는 달리 7개 전략 과제만 선별해서 제시한 이유가 있는지?
- 발표문에서 제시된 탈북여성 관련 통계 자료는 언제 어떻게 수집·분석한 자료인지 출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특히 <표1>에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 중에 겪은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 발표문을 통해 탈북여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함께 향후 지향해야 할 이상적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탈북여성의 실제 역량과 잠재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하는 별도의 접근이 필요함. 탈북여성을 위한 정책과 환경이 마련되기만 하면 현행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회통합을 이뤄갈 수



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탈북여성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도출되어야 함.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이는 발표문의 방안제시가 수용되기가 쉽지 않음. 남한 사회 정착 이후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 여성의 능력이 변화하고 향상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와 구체적 지표도 아울러 제시할 수 있어야만, 발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들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음. 그렇지 않으면 희망형 정책 제시로 그칠 가능성이 큼. 탈북여성 정책은 정책의 내용, 정책 실행 환경, 그리고 탈북여성 자신의 능력과 의지가 합해져야 비로소 효율성과 성과를 낼 수 있음. 탈북여성 자체를 평가하는 내용이 부가되기를 기대함

- [탈북여성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김화순 연구위원)에서 정착과정별 전달체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가운데, 탈북자 업무를 각 지자체 및 전문부처와 공동협력할 수 있도록 법안을 다시 개정하여야 한다는 법률개정안을 대한변협에서 제기했음을 지적하고 있음. 대한변협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조로 해서 탈북자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전문부처인 교육부-고용노동부 등과 공유하는 대한변협안을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는데, 발표문의 내용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자 함

### 3. 발표문과 관련된 기타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회적 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하는데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함. 법에서 정한 기한(1년)을 넘겨도 기초수급생활권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편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실제로 쉽지 않음
- 행복한 가정운영 프로그램의 대상에 탈북 남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탈북여성 교육만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큼.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탈북여성 성매매 방지에 대한 정책은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음. 탈북여성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역행하는 매우 안 좋은 현안이라는 점에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함. 성병에 걸린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 개별 접근 방안도 마련해야 함. 유흥업에 종사할 경우와 관련된 법적 제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 교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함
- 김화순 연구위원이 제기한 탈북여대생 관련 대책 가운데 계절학기 수강료 지원 문제에 대한 의견에 공감함. 그러나 계절학기 수강은 학생 개별적 선택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남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학교 교

육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음. 이를 고려하여 서강대는 근로학생으로 선발하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 후 근로장학금으로 계절학기 수강료를 대신하는 방안을 운영하고 있음. 정규 학기 중에 많은 학점 취득이 어려운 탈북학생들을 고려하여 계절학기 수업을 적극 권장할 필요 있음

- 생애주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함. 두 발표문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기를 기대함
- 탈북여성의 성적 경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표현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함. 일반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일반화하는 결과를 종종 낳고 있음. 이는 젠더문제보다 더 중요한 현안임



## 여성정책포럼 「탈북여성의 사회통합」 토론문

최영애 (북한이탈여성지원과연대 대표)

### 1. 총 평

현재 우리사회는 탈북자 2만 명시대로 진입하고 이 중 여성이 70-8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두 분의 발제자가 기존의 탈북자 지원정책의 성격과 내용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성인지적 관점으로 탈북자의 거의 80%에 달하는 ‘탈북여성 지원정책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는 매우 신선하고 고무적이다. 특히 탈북여성들의 계층별 특성과 다양성을 토대로 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전문직 여성들의 적극적 활용방안 및 정착시기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략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기관의 정책실행과제 집행과정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

특히 두 논문에서는 기존의 탈북자 지원정책에서의 탈북자의 위상 및 일반적 이미지로 고착되었던 일방적 수혜대상자, 빈곤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등의 왜곡된 이미지를 젠더적 관점에서 새로운 위상정립과 사회적 이미지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탈북여성들의 역량강화는 미래 한국사회통합의 주요한 토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관점은 탈북여성 당사자의 측면에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위상정립을 피해자, 취약계층 수혜자의 정체성에서 ‘한국사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 가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논문 모두 탈북여성 경제적 자립을 한국사회 정착의 핵심요인이자 사회통합의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주로 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물론 경제적 자립과 취업, 고용의 안정성은 탈북여성들의 한국사회정착과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토대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취업과 고용의 안정성은 탈북여성들의

한국사회구조와 문화에 대한 이질감과 문화적 충격의 문제 그리고 한국사회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해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 및 사회적 기대 등에 대한 총체적 이해 정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탈북여성들의 사적 영역에서의 결혼, 이혼, 연애, 성 등의 문제와 자녀교육, 양육방식 등은 취업, 진학 등 공적인 영역에서의 진입과 유지의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 일반의 경우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탈북여성 사회통합 연구는 탈북여성들의 일상적, 문화적 삶속에서의 가족, 부부,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위기상담과 지원정책을 집단별, 계층별, 연령별로 섬세한 전략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문화통합 문제는 탈북여성들만의 노력과 교육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사회의 탈북자와 탈북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태도의 변화 역시 동시에 수반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젠더적 관점과 평화적 관점을 견지한 남북여성들의 상호교류와 연대를 통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한국여성의 성차별과 인권문제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과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비정부기구와 NGO 여성단체들과의 긴밀한 연대 네트워크 구축방안 및 지원정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 2. 장미혜 연구위원, “탈북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10대 전략”

본 발제문에서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노령자와 장애인 그리고 경제활동 대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대상 구분에 젠더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젠더적 관점에서 탈북여성들의 특성과 다양성을 토대로 정착시기별,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는 대부분의 탈북여성들은 제 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기간 동안에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많은 상처와 고통의 경험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 심신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탈북여성정착지원은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자립등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토론자도 이러한 입장을 전적으로 동의, 지지한다.

연구자가 제시한 10대 전략과제는 원스톱서비스체계 등의 지원체계의 문제와 취업과 고용안정화 전략, 전문직, 고학력여성들의 적극적 활용 방안과 교직 경력 여성들의 탈북자(여

성) 교육 및 자녀 교육 기관 등에서의 교육 담당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행복한 가족’ 유지라는 관점에서 행복한 가정운영 방안으로 위기상담, 부부의사소통상담, 가정폭력쉼터 등의 전략과제 등이다. 그리고 탈북여성들의 성매매 등의 특수취약계층 여성에 관한 대응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과제들은 대체적으로 탈북여성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본 발제문에서는 취업을 골간으로 하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방안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서적, 심리적치유와 지원 방안은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탈북여성들의 트라우마 치유와 정서적, 심리적 지원프로그램이 어느 기간에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잘 보이지 않는것 같다. 이외 연구자가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략과제와 방향은 매우 적절하고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가지 향후 토론이 필요한 과제로는 가정폭력시설이나 이주여성 쉼터 중 일부를 탈북여성 중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전담시설로 운영하자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이주여성 쉼터의 경우, 언어의 문제와 문화적 차이 등의 문제로 인해 독자적 쉼터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탈북여성들만의 쉼터 운영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허나, 탈북여성이라는 동질성만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하나의 쉼터에서 상담과 치유의 과정을 함께 전문적으로 지원 받기는 어렵다. 각 각의 특성에 따라 상담의 내용과 프로그램이 달리 운영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각 피해 유형별로 탈북여성 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해답일까? 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각 유형별 쉼터에서 일반 한국여성 피해자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문제의 본질이 탈북여성이어서 겪게 되는 탈북자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성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도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여성 피해자들의 상호 연대감은 역동적인 역량강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기존의 각 영역별 전문 쉼터 관련자들과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하나의 토론과제로는, 연구자가 네 번째 과제로 행복한 가정운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안하고 있는 공모전을 통한 우수한 ‘행복한 가정운영’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방식이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자칫 ‘행복한 가정’에 대한 고정적 이미지와 전통적 성역할 고정방안에 입각한 ‘전형적 가정’이 강조되거나 ‘행복’이라

는 수식어가 불행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는 이분법적인 경직된 가정관을 초래할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복한’이라는 용어 사용과 경쟁적 ‘공모전’이라는 방식에 대한 전략은 젠더적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되었으면 한다.

### 3. 김화순 연구원, “탈북여성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

본 발제문은 탈북여성의 일자리 문제를 사회통합의 핵심적 과제로 설정하고 탈북여성의 일자리를 계층별 다양성과 특성을 고려하면서 집단별, 정착단계별 사회통합 추진 기본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젠더적 관점에서 탈북여성들의 일자리를 계층별, 집단별 특성을 토대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탈북여성 일자리 관련 연구들을 진일보시킨 연구로 평가할 만 하다.

본 발제문에서는 탈북여성들의 사회통합 문제는 궁극적으로 탈북여성들의 인력자원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여성 정착문제를 단지 정착지원의 관점이 아닌 사회통합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인력자원을 개발하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탈북자, 탈북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수동적 수혜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의 성격을 능동적 사회통합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투자로 전환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본 연구자는 발제문에서 현행 탈북자 일자리대책이 취업우선전략으로 선회하면서 탈북자의 경쟁력을 요구하는 방식은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질적인 가족 생계 부담과 가사노동의 주 책임자인 여성들에게는 직업훈련이나 전일제 고용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또한 건강의 취약성, 육아와 결혼, 학업, 돈을 북한가족에게 보내야 하는 부담감 등은 경쟁력 우선적 정책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취업지원금은 종일 근무 훈련 노력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탈북자 취업지원금 대부분은 탈북자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남성 탈북자들에게 돌아가고 탈북자의 80%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불합리적이고 젠더적 관점이 결여된 일자리대책은 탈북여성들의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자가 제기하고 있는 젠더적 관점에서의 생애주기별 정착지원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의 수평적 파트너로서의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토론자의 수년간의 한국여성인권운동의 현장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개인적 경험을 돌이켜 보면, 여성인권과 성차별의 문제는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의 문화,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정부기관의 정책적 집행만으로 극복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탈북여성 사회통합의 문제는 여성인권 관련 영역에서 상당한 사회적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비정부기구, NGO 단체들과의 유기적 네트워크와 긴밀한 협조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전문성과 사회적 통합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기구를 많이 양산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관련 기관들 간의 업무의 중복이나 유기적 네트워크와 의사소통의 마찰이 야기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결과적으로 탈북여성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 한국사회의 가능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 전략이 개발되어지기를 기대한다.



## 탈북여성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오태봉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과장)

### 1. 주제 발표에 대한 소감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주민의 약 70%가 여성으로, 2만 여명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비중으로 볼 때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탈북여성들은 이제 한국사회의 하나의 사회계층으로 되고 있고 그들의 사회통합 문제 또한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가 탈북여성들의 사회정착, 특히 한국사회에 편입되게 하기 위한 사회통합을 주제로 진행되게 된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화순 연구위원(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의 발표문은 현재 탈북 여성들의 사회 정착에서 겪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특히 정부 정책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 다룬 것으로 실로 시의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탈북여성의 사회통합 문제를 지속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통일부 정착사무소(하나원) 교육프로그램에서부터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에 나와서도 자기 직성과 눈높이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취업박람회 및 인턴십(체험) 등 취업 우선전략으로 선회되고 있다.

탈북 주민의 미래지향적인 인적개발 차원에서 실시되는 특례입학 제도에 힘입어 현재 탈북대학생 수는 약 1천명, 이 중 여성의 비율이 600~700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주선으로 탈북여성 취업위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탈북 여성들 속에서는 실제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질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발표자께서 탈북여성의 사회통합을 고학력자 위주로 정착을 선행시키면서 그들이 사회지도자가 되어 새로운 후배 집단의 사회 편입화를 촉진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발표문에서 또한 유홍업 종사자 탈북 여성 등에 대한 사회적 교육, 구제 방법 등을 제기한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발표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유홍업에 종사하는 탈북여성 계층과 장애인 및 다자녀 부양 탈북여성문제 등 특수 취약 계층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

본 발표문에서 탈북여성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여러가지 대책적 제언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해보면서 몇 가지 보충하고자 한다.

## 2. 탈북 여성의 사회통합에서 보완점

### 1) 탈북 여성의 정신·심리 상담 치료 필요성

탈북자들의 정착에서 보편적인 애로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및 외로움 등으로 여성들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탈북자들이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에서의 억압된 생활과 탈북 과정에서의 정신·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남한 사회적응이 더욱 어렵다. 북한에서는 식량 부족, 삶의 질, 정치적 억압 문제 등이 발생하고, 탈북하게 되면 체포당할 위험, 죽음의 위협,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등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국내에 들어와서도 가족의 상실과 죄책감, 사회적 차별, 편견 등으로 인해 탈북자들의 정신·심리적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하다.

이에 따라 탈북 여성들의 정신·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탈북자 정신건강 관련해 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관들과 하나센터 등 탈북자 지원센터들의 역할과 함께 학계에서도 연구활동을 벌여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탈북여성들의 정신·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정신·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통합적인 탈북자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 2) 탈북 여성 차별, 스트레스 구제 대책

탈북 여성들이 한국사회 생활 중 어려움은 ‘탈북자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 ‘남북한 언어의 차이’와 ‘문화적 이질’이라고 볼 수 있다.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은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차별이다.

탈북자들이 취업이 안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선입견 때문에 비롯되는 것도 있다. 남한 국민들이 탈북자들도 이웃처럼 대하는 마음 가짐과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황장엽씨 ‘살해조’와 이따금씩 발표되는 ‘간첩’ 적발 뉴스로 해서 가뜩이나 소외된 탈북자들의 사회정착을 더 어렵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지역사회에서는 북한 문화 알리기, 탈북자들과의 운동회 등 주민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대안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탈북여성들끼리 자활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의지하며 돕도록 ‘탈북자 지역 협의회’를 자치단체별로 만들도록 정부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 3. 탈북 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 특성화 프로그램

향후 탈북 여성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소외계층 탈북 여성들의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여성 및 자녀 보육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맞벌이, 한부모 북한이탈 주민가정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 아동 및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여성들에게 교육, 문화적 격차를 보완하고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도록 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예비, 초보 엄마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육아 교육을 통한 자립 자활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적응력을 키워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재단에서는

**첫째로,** 여성쉼터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에 약 4천명 규모, 경기도에 약 2천명 규모, 대전 2천명 등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및 미혼모 적극 유치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한 여성취업, 재활, 심리치료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미혼산모 및 가정피해 여성 등 소외계층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경제교육, 직업능력개발 활동, 취업처 확보, 심리·정서적 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임신, 출산,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 및 코칭활동도 벌인다.

**둘째로,** 방과후 공부방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방과후 공부방 운영제도는 탈북 아동 청소년들의 자율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미취학 아동들의 보육지원을 위해서 보조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곳에 한겨레고등학교와 여명학교, 한꿈학교 등 대안학교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있지만, 7~12세 아동이 501명으로, 전체 탈북자의 3%를 차지하는 현실 조건에서 비보호 아동 등 탈북청소년 증가에 따른 조치로 풀이해볼 수 있다.

**셋째로,** 영유아 보육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지원은 탈북 여성들 속에서 맞벌이, 한부모, 기타 자녀를 돌 볼 수 없는 심신장애자의 가정까지 돌봄으로써 탈북자 가정 부모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자활, 자립의식 고취하도록 한다.(09.11월 현재 0~9세 영유아 수는 685명, 전체 탈북자의 약 4%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미혼산모를 비롯한 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고 가정피해여성의 심리·정서적 지원 및 법적 상담 서비스 마련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미혼산모 및 가정피해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경제교육, 직업능력개발활동, 취업처 확보 등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본다.